

연구보고서
2006-04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송두범 · 조봉운

연구보고서
2006-04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2006.10

충남발전연구원

ISBN : 978-89-89552-74-1 93030

연구보고서 2006-04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송두범 · 조봉운

발 간 사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지방분권, 수도권 발전전략과 함께 21세기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핵심과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추진해 왔다.

2006년 1월 행정도시건설청이 개청되면서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개발계획과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아울러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변지역 관리계획, 주변지역 지원계획 또한 수립중에 있다.

지금까지 행정도시는 대부분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계획수립, 보상대책, 첫마을 사업 등이 추진되어 왔으며,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주변지역 난개발방지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해당 자치단체나 지여주민들에게 계획에 대한 정보제공은 제한적이고, 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참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법적지위가 결정되지 않아 주변지역이 어떤 행정구역에 포함될지 모르지만, 계획수립과정에 적어도 현재의 행정구역인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의 적극적인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고,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능동적으로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변지역 관리·지원계획이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나 주변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직까지 계획이 마무리 되지 않았고, 주변지역을 바라보는 정부와 지역주민의 시

각차가 크지만, 가능하면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수립된 계획안에 대해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였다.

2006년 10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 용 응

목 차

발간사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3. 용어정의	6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주변지역 여건분석	8
1. 선행연구 검토	8
2. 주변지역 여건분석	9
3. 주변지역 관리현황	29
제3장 주변지역 관리·지원제도 검토	37
1. 용도지역·지구 허용행위 및 건축밀도 현황	37
2. 주변지역 행위제한 검토	44
3. 주변지역 지원제도 검토	54
4. 주민지원제도의 주요내용	58
5. 국내외 사례분석	71
제4장 주변지역 관리·지원내용 분석	76
1. 주변지역 관리방안의 내용분석	76

2. 주변지역 지원방안의 내용분석	85
제5장 주변지역의 관리·지원체계 개선방안	90
1. 주변지역 관리체계 개선방안	90
2. 주변지역 지원체계 개선방안	96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03
1. 요약 및 결론	103
2. 정책제언	108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08
참고문헌	110
부록	111

표 목 차

<표 1-1> 시군별 응답자	5
<표 1-2> 조사대상의 직업(소속)	5
<표 2-1> 주변지역 지정현황	9
<표 2-2>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현황	10
<표 2-3> 주변지역 인구 및 세대현황	15
<표 2-4> 인구 및 세대수 현황	16
<표 2-5> 주변지역 산업단지 세부현황	18
<표 2-6> 주변지역 개별입지 대규모 공장 세부현황	18
<표 2-7> 주변지역 가구 및 주택현황	19
<표 2-8> 주변지역 상수도 세부현황	20
<표 2-9> 주변지역 하수도 세부현황	20
<표 2-10> 공원 및 녹지현황	21
<표 2-11> 주변지역 면 소재 교육시설 현황	22
<표 2-12> 마을공동시설 설치여부	27
<표 2-13> 생활여건 및 생산기반 확충 필요성	28
<표 2-14> 주변지역내 기존구역 등 총괄개요	30
<표 2-15>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31
<표 2-16>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32
<표 2-17>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32
<표 2-18>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특정형)	32
<표 2-19> 취락지구현황	33

<표 2-20> 문화재보호구역	35
<표 2-21> 문화재	35
<표 2-22> 군사시설보호구역	36
<표 3-1>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허용행위	38
<표 3-2> 일반상업지역에서의 허용행위	39
<표 3-3> 일반공업지역에서의 허용행위	39
<표 3-4> 생산·자연녹지지역에서의 허용행위	40
<표 3-5>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허용행위	41
<표 3-6> 농림지역에서의 허용행위	41
<표 3-7>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허용행위	42
<표 3-8> 자연취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42
<표 3-9> 용도지역별 건폐율	43
<표 3-10> 용도지역별 용적률	44
<표 3-11> 용도구역별 지정목적	45
<표 3-12>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51
<표 3-13> 시가화조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등 비교	52
<표 3-14> 시가화조정구역과 타 구역의 행위제한 비교	53
<표 3-15> 현행 주민지원제도	54
<표 3-16>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56
<표 3-17> 주민지원제도의 목적	58
<표 3-18> 주민지원제도의 성격	59
<표 3-19> 주민지원제도의 지원주체	60
<표 3-20> 주민지원제도의 지원대상	61
<표 3-21> 주민지원제도의 사업내용	62
<표 3-22>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62
<표 3-2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63
<표 3-24>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유형	63
<표 3-25> 4대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64

<표 3-26>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유형	65
<표 3-27> 자연공원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유형	65
<표 3-28>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의 종류	66
<표 3-29>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의 종류	66
<표 3-3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67
<표 3-31>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내용	68
<표 3-32> 각종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의견 수렴방법 비교	69
<표 3-33> 각종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비교	69
<표 3-34> 주민지원제도의 재원조달	70
<표 4-1> 주변지역 관리의 문제점	84
<표 4-2> 계획수립 대상지역 해당 여부	85
<표 4-3> 지역단위 대상시설의 선정결과	87
<표 4-4> 주변지역 지원의 문제점	89
<표 5-1> 주변지역 관리 개선방안	95
<표 5-2> 주변지역 지원 개선방안	102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접근방법	7
[그림 2-1] 표고 분석도	11
[그림 2-2] 경사 분석도	12
[그림 2-3] 주요하천	12
[그림 2-4] 생태자연도	13
[그림 2-6] 임상도	14
[그림 2-7] 보전산지 분포도	14
[그림 2-8] 국토이용계획도	24
[그림 2-9] 존치구역 분포도면	34
[그림 3-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지원사업 절차	57
[그림 3-2] 영종지구 개발구상도	71
[그림 4-1]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 적용에 대한 인지여부	79
[그림 4-2]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 내용에 대한 인지여부	80
[그림 4-3] 시가화조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비교	82
[그림 5-1] 도시관리계획 수립까지 주변지역 행위제한 방향	93
[그림 5-2]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인지여부	97
[그림 5-3]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내용인지여부	97
[그림 5-4]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선정방식	99
[그림 5-5]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질적 도움여부	101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은 주변도시와의 연담화와 난개발을 방지하는 완충지역으로서 기능,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 도시와 관련되는 연구는 대부분 예정지역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는 예정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 보다 앞서 수도건설을 추진해왔던 앙카라나 브라질리아 등은 주변지역 관리 계획의 부재로 인구집중 및 무질서한 도시 확산, 주변지역 난개발 등의 도시문제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변지역이 도시성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주변도시와의 연담화와 난개발을 방지하는 완충지역, 도시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주변의 개발을 억제하고 예정지역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추진, 도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필수적인 깨끗한 공기, 물,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면적으로 녹지를 보전하고 레저·스포츠단지, 자연공원 등의 조성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건설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2005).

그러나,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금지하는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¹⁾으로 인한 불만사항 및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됨에 따라 연구를 시작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행정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에서 과도한 행위제한을 지양하여 거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주민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 차원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으로 거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둘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에 규정된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 등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주변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제한과 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개발유도 및 계획적 관리수단으로서의 용도구역은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가화조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특별히 시가화조정구역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주변지역지원사업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그 밖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복지증진 또는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포함한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내용별로 문헌분석, 전문가 및 주변지역 이장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개념정립, 선행연구, 외국사례 등을 분석하기 위해 학문적·실증적 차원에서 행해진 기존의 국내문헌을 분석하였다. 또한, 주변지역 이장을 대상으로 마을별 공동시설 설치여부, 마을의 생활여건 및 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대학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주변지역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행위제한의 수준과 지원사업의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설문하였다. 셋째, 주변지역의 공동시설의 설치 및 제공여부, 마을의 생활여건 및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 이장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1) 이장조사

① 조사목적 및 내용

본 조사는 주변지역 마을(행정리) 이장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시설의 설치여부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표 부록참고).

본 조사는 주변지역 마을공동시설의 설치여부(기설치, 설치중, 미설치), 마을의 생활여건 및 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② 조사대상 및 배포·회수현황

조사대상은 주변지역내 134개 마을 이장이다. 이들 조사대상에게 조사표에 직접 기입케 하였으며, 연기군 남면 놀왕리와 연기1리를 제외한 132개 마을 이장의 조사를 통계처리하였다.

〈표 1-1〉 시군별 응답자

구 분	빈 도(명)	비 율(%)
연기군	72	54.5
공주시	26	19.7
청원군	34	25.8

(2) 전문가 조사

① 조사목적 및 내용

본 조사는 행정도시주변지역 관리 및 지원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 관리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청권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였다. 2006년 10월 10일에서 2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조사하였다(조사표 부록참고).

본 조사는 응답자의 일반현황, 주변지역 행위제한(행위제한 인지여부, 행위제한 내용, 행위제한 수준, 행위제한의 방향), 주민지원사업(지원사업 인지여부, 지원사업내용, 지원사업의 유용성, 지원사업 방향) 등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조사대상 및 배포·회수현황

조사대상은 충청권내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공학, 교통공학, 행정학 등을 전공한 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100명이다. 이들 조사대상에게 조사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최종회수된 43명의 조사를 통계분석 처리하였다.

본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및 공무원의 직업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2〉 조사대상의 직업(소속)

구 분	빈 도(명)	비율(%)
대학교수	10	23.3%
연구원	23	53.5%
공무원	10	23.3%

3. 용어 정의

1) 주변지역

“주변지역”이라 함은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2조 3항).

2) 시가화조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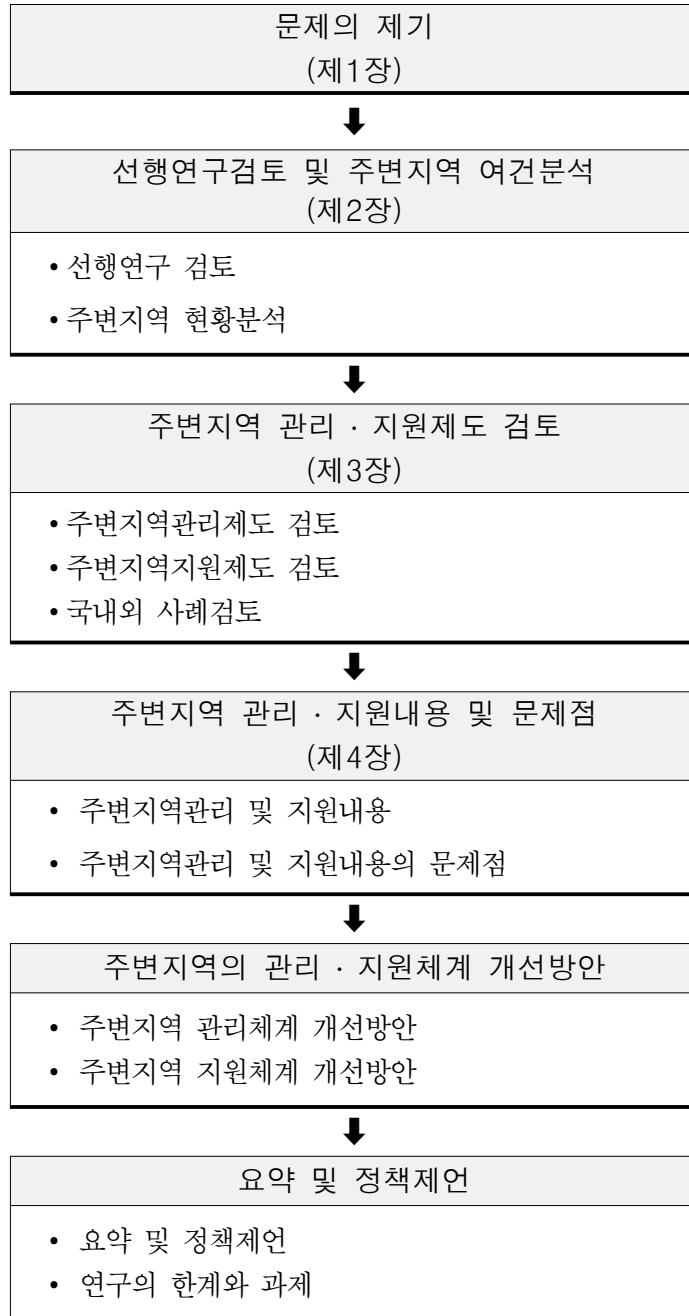
“시가화조정구역”이라 함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기간(5·20년 이내)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9조 1항).

3) 주변지역 관리

주변지역관리라 함은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존치구역과 비존치구역으로 구분하여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과 같은 행위제한으로 정의한다.

4) 주변지역 지원

주변지역지원이라 함은 주변지역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과 생활편익·복지증진 또는 소득증대 등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규정된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정의한다.



[그림 1-1] 연구의 접근방법

제2장 선행연구검토 및 주변지역 여건분석

1. 선행연구검토

본 연구에서의 선행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과 주민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와 관련해서는 최정우·김영환·진미윤(2004), 국토연구원(2006) 등이 연구가 있다.

최정우 등은 신행정수도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 주요 난개발 수단으로 시가화조정구역, 개발행위허가제, 개발부담금 부과, 시가화예정용지 지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존치구역은 행위제한 강화, 개발행위 승인기준 강화 적용, 비존치구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규제유지, 제한된 지역에 계획적 개발허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집단취락지역 지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주변지역 주민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토연구원(2006)에서 수행중인 「행정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2)에서 수행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외에도 댐·발전소주변지역,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마을단위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을 일반마을과 특화마을로 구분하고 일반마을에는 생활편익·복지증진시설사업을 실시하고, 특화마을은 소득증대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되, 공공적성격이 약한 지원사업은 발전사업자의 자율적 사업으로 전환하고, 소득지원사업과 공공

시설사업의 통합, 육영사업은 기본지원사업에서 분리, 전기요금 보조사업의 단계적 확대, 사회복지사업 및 이주민 대책사업 신설,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사업은 축소내지 점진적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2. 주변지역 여건분석2)

1) 주변지역의 지정현황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경계는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폭 4~5km 범위에서 설정하되 행정구역 및 조치원 도시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표 2-1〉 주변지역 지정현황

구 분		예정지역	주변지역
지정면적		73.14km ² (2,212만평)	223.77km ² (6,769만평)
편입행정구역		연기군 3개면 28개리 공주시 2개면 5개리	연기군 4개면 43개리 공주시 3개면 20개리 청원군 2개면 11개리
행정 구역별	연기군 (361.5km ²)	68km ² (93%) (연기군 전체의 18.8%)	119km ² (53%) (연기군 전체의 32.9%)
	공주시 (940.7km ²)	5km ² (7%) (공주시 전체의 0.5%)	72km ² (32%) (공주시 전체의 7.7%)
	청원군 (814.3km ²)	-	33km ² (15%) (청원군 전체의 4%)
용도 지역별	도시지역	0.6km ² (0.8%)	49.7km ² (22.2%)
	관리지역	46.0km ² (63.0%)	104.4km ² (46.6%)
	농림지역	26.4km ² (36.2%)	69.2km ² (30.9%)
	자연환경보전	-	0.7km ² (0.3%)
지목별	임	30.4km ² (41.7%)	
	답	16.7km ² (22.9%)	
	전	7.4km ² (10.1%)	
	대	1.8km ² (2.4%)	
	하 천	9.2km ² (12.6%)	
	기 타	7.5km ² (10.3%)	
인구(세대)		9.8천명 (4천세대)	37천명 (14천세대)
필 지		31,874필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충남 연기군·공주시 및 충북 청원군의 3개 시·군, 9개면 74개리가 편입되고, 면적은 약 224km²(6,780만평)이며, 2006년 현재 약 14,000세대, 37,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2) 국토연구원, 행정중심 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연구, 2006. 3. 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표 2-2〉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현황

구 분		편 입 지 역
연기군	금남면	감성리 · 금천리 · 남곡리 · 달전리 · 대박리 · 도암리 · 두만리 · 박산리 · 발산리 · 영대리 · 영치리 · 용담리 · 추산리 전지역, 대평리 · 부용리 · 성덕리 · 신촌리 · 영곡리 · 용포리 · 장재리 · 호탄리 · 황용리 일부지역
	남 면	눌왕리 · 수산리 전지역, 보통리 · 연기리 일부 지역
	동 면	내판리 · 노송리 · 명학리 · 송용리 · 응암리 전지역, 문주리 · 합강리 · 예양리 일부 지역
	서 면	국촌리 · 기룡리 · 봉암리 · 부동리 · 신대리 · 와촌리 전지역, 성제리 · 쌍전리 · 월하리 일부 지역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 · 도계리 · 봉안리 · 송문리 · 은용리 · 평기리 · 하봉리 전지역, 금암리 · 산학리 · 제천리 일부 지역
	반포면	국곡리 · 도남리 · 봉암리 · 성강리 전지역, 원봉리 일부 지역
	의당면	송정리 · 송학리 · 용암리 · 용현리 · 태산리 전지역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 금호리 · 노호리 · 등곡리 · 문곡리 · 부강리 · 산수리 · 행산리 전지역
	강내면	당곡리 · 사곡리 · 저산리 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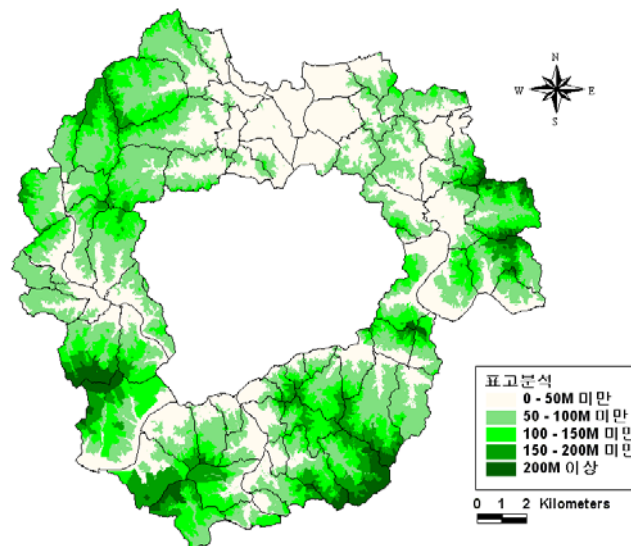
2) 주변지역의 물리적 현황

(1) 표고 및 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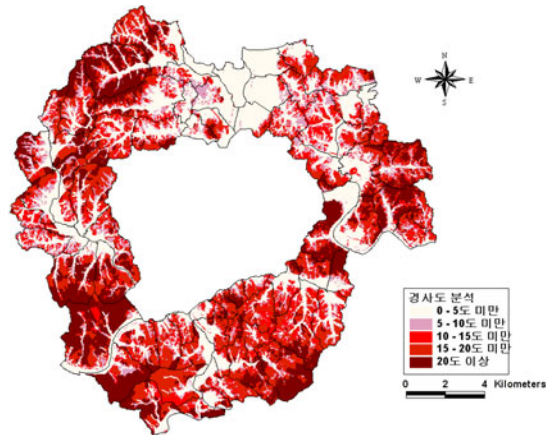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은 금강 및 미호천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주변에 발달한 지역으로, 100m이하 표고가 전체면적의 약40%를 형성할 정도로 낮은 구릉성 산지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주변지역 남측 연기군 금남면, 남서측 공주시 장기면 일대, 동측 청원군 부용면 일부지역은 200m이상의 지역내에서는 비교적 높은 표고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10도 미만이 완경사지가 전체의 42%, 20도 이상의 급경사지가 약 23%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2-1] 표고 분석도



[그림 2-2] 경사 분석도

(2) 주요하천

주변지역의 주요하천은 국가하천인 금강(395.90km, 유역면적 9,810.4km²)과 지방1급하천인 미호천(유로연장 39.4km, 유역면적 571.64km²)이 통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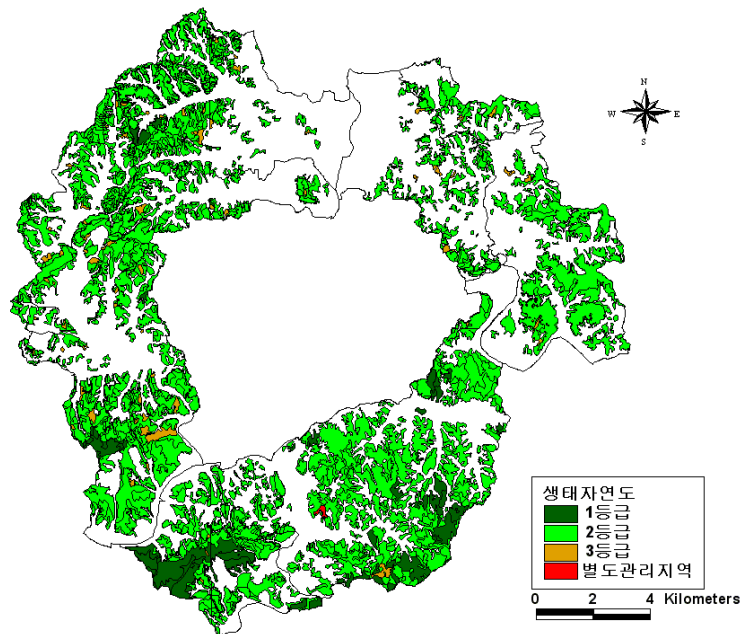
이외에도 주변지역을 통과하여 대교천, 용수천, 삼정천이 금강으로, 월하천, 연기천이 미호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림 2-3] 주요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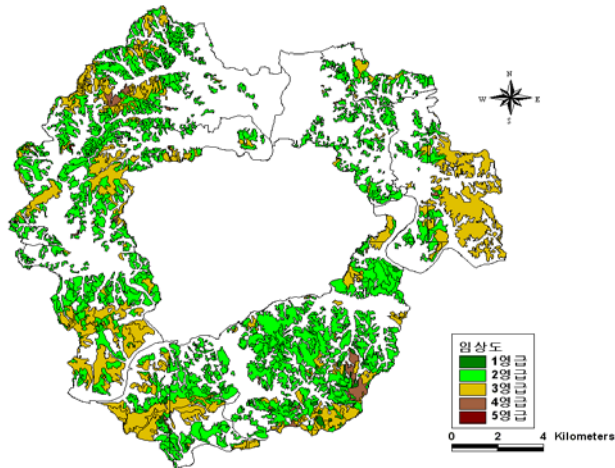
(3) 생태자연도 및 임상도

주변지역 내에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9.06km²(4.0%),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101.17km²(45.2%), 생태자연도 3등급지 2.36km²이며 별도관리지역 0.09km²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공주시 반포면과 연기군 금남면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2-4] 생태자연도

한편, 주변지역 내에는 3등급 이상 지역이 32.1%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4등급 이상 지역은 1.3%에 불과하다. 임상도 3등급 이상 지역은 주로 부용면, 장기면, 금남면 지역에 집중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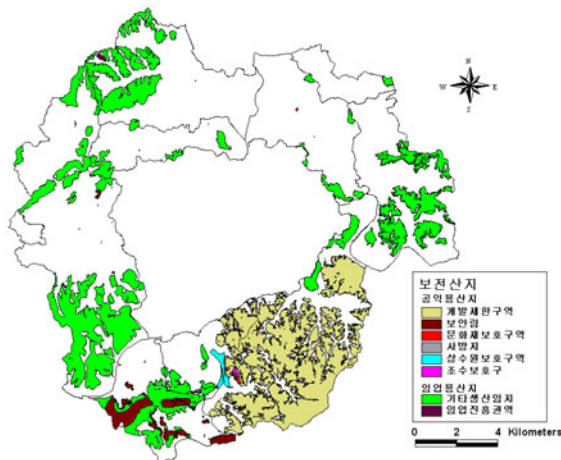


[그림 2-6] 임상도

(4) 보전산지

보전산지는 전체면적이 71.93km²로 주변지역 전체면적의 약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공익용 산지가 14.2%, 임업용산지가 17.9%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용 산지중 개발제한구역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대부분 임업용산지(기타생산임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7] 보전산지 분포도

(5) 종합

주변지역은 대부분 저지형의 구릉성 산지로 완경사형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강과 미호천이 주변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완충지역 및 보호가치가 있는 생태자연도 2등급지, 임상도 4등급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전산지는 전체면적의 32%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과 임업용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변지역의 물리적 환경은 자연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아닌 전형적인 농촌지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3) 인문사회환경 분석

(1) 인구 및 세대

2005년 현재 주변지역 인구는 35,394명으로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연기군 인구의 24.7%, 공주시 인구의 4.7%, 청원군 인구의 6.8%에 해당한다.

또한, 주변지역 전체 인구 중 연기군 인구가 21,115명으로 64.3%, 청원군 인구가 8,108명으로 24.7%, 공주시 인구가 6,171명으로 17.4%를 차지하고 있다.

주변지역 인구를 리 단위로 살펴보면,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가 4,808명으로 가장 많고,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가 4,335명, 연기군 서면 봉암리가 2,860명, 연기군 동면 명학리가 1,243명, 연기군 남면 연기리가 1,070명 등의 순으로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대부분 도시지역이나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이다.

〈표 2-3〉 주변지역 인구 및 세대현황

(2005. 03. 31일 현재)

구 분	면 적 (km ²)	인 구 (인)	세 대	세대당 인구 (인/세대)	인구밀도 (인/ha)
계	223.7	35,394	13,613	2.6	1.6
공 주 시	71.8	6,171	2,270	2.7	0.9
연 기 군	118.6	21,115	8,384	2.5	1.8
청 원 군	33.5	8,108	2,959	2.7	2.4

세대당 인구수는 2.6인으로 각 면들이 비슷하고, 인구밀도는 1.6인/ha으로 시·군전체 인구밀도와 비슷한 수준이다.³⁾ 시군별로는 청원군 주변지역의 인구밀도가 2.4/ha인으로 가장 높고 연기군 주변지역이 1.8/ha인이며 공주시 주변지역이 0.9/ha인으로 가장 낮다.

〈표 2-4〉 인구 및 세대수 현황

구 분	면적(km ²)	인 구		세 대		세대당인구 (인/세대)	인구밀도 (인/ha)
		총인구(인)	비율(%)	세대수(세대)	비율(%)		
부강리	4.1	4,808	14.7	1,673	13.1	29	11.8
금호리	4.5	430	1.3	172	1.3	25	1.0
등곡리	4.9	413	1.3	159	1.2	26	0.8
노호리	2.2	212	0.6	97	0.8	22	1.0
문곡리	5.4	676	2.1	262	2.1	26	1.3
행신리	2.5	210	0.6	82	0.6	26	0.8
신수리	1.9	184	0.6	70	0.5	26	1.0
갈산리	2.0	338	1.0	129	1.0	26	1.7
부용면	27.4	7,271	22.2	2,644	20.7	28	2.7
저산리	2.9	333	1.0	138	1.1	24	1.2
당곡리	1.0	79	0.2	31	0.2	25	0.8
사곡리	2.2	425	1.3	146	1.1	29	1.9
강내면	6.1	837	2.6	315	2.5	27	1.4
청원군 주변지역	33.5	8,108	24.7	2,959	23.2	2.7	2.4
성강리	4.2	180	0.5	72	0.6	25	1.1
봉암리	1.6	91	0.3	32	0.3	28	0.2
국곡리	3.8	231	0.7	93	0.7	25	0.6
원봉리	3.9	219	0.7	99	0.8	22	0.6
도남리	4.6	139	0.4	53	0.4	26	0.3
반포면	18.0	860	2.6	349	2.7	25	0.5
도계리	1.6	998	3.0	261	2.0	38	6.3
평기리	3.3	463	1.4	183	1.4	25	1.4
대교리	5.5	737	2.2	274	2.2	27	1.3
봉안리	3.6	370	1.1	147	1.2	25	1.0
제천리	0.1	9	0.0	5	0.0	1.8	1.1
하봉리	2.5	383	1.2	141	1.1	27	1.5
신학리	4.0	381	1.2	135	1.1	28	1.0
은용리	5.9	344	1.0	137	1.1	25	0.6
금암리	10.0	434	1.3	167	1.3	26	0.4
송문리	3.0	286	0.9	107	0.8	27	0.9
장기면	39.5	4,405	12.4	1,557	11.4	28	1.1
송정리	1.4	84	0.3	31	0.2	27	0.6
송학리	3.7	339	1.0	134	1.1	25	0.9
용현리	2.2	101	0.3	37	0.3	27	0.5
용암리	5.0	208	0.6	96	0.7	22	0.4
태산리	2.0	174	0.5	67	0.5	26	0.9
의당면	14.3	906	2.8	364	2.9	25	0.6

(다음쪽으로 이어짐)

3)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전체인구는 336,463명이고 면적은 2,116.54km²로 인구밀도는 1.6인/ha 임

구 분	면적(km)	인 구		세 대		세대당인구 (인/세대)	인구밀도 (인/ha)
		총인구(인)	비율(%)	세대수(세대)	비율(%)		
공주시 주변지역	71.8	6,171	17.4	2,270	16.7	27	0.9
내판리	2.8	997	3.0	385	3.0	26	3.6
문주리	2.3	126	0.4	58	0.5	22	0.5
합강리	0.3	9	0.0	5	0.0	1.8	0.3
명학리	3.5	1,243	3.8	640	5.0	1.9	3.5
응암리	4.7	427	1.3	171	1.3	25	0.9
노송리	1.9	478	1.5	210	1.6	23	2.6
예양리	2.6	381	1.2	144	1.1	26	1.4
송용리	3.1	505	1.5	218	1.7	23	1.6
동면	21.1	4,166	12.7	1,831	14.4	23	2.0
월하리	2.3	-	-	-	-	-	-
쌍전리	0.9	-	-	-	-	-	-
성제리	2.4	259	0.8	117	0.9	22	1.1
기룡리	7.2	460	1.4	199	1.6	23	0.6
신대리	4.8	446	1.4	167	1.3	27	0.9
국촌리	1.6	333	1.0	119	0.9	28	2.0
와촌리	6.7	704	2.1	290	2.3	24	1.0
부동리	1.4	300	0.9	125	1.0	24	2.2
봉암리	3.2	2,860	8.7	1,010	7.9	28	9.1
서면	30.4	5,362	16.3	2,027	15.9	26	1.8
연기리	1.5	1,070	3.3	415	3.3	26	7.1
보통리	2.2	764	2.3	270	2.1	28	3.4
눌왕리	3.6	507	1.5	183	1.4	28	1.4
수산리	5.1	296	0.9	114	0.9	26	0.6
남면	12.5	2,637	8.0	982	7.7	27	2.1
용포리	1.3	4,335	13.2	1,643	12.9	26	33.6
발산리	1.9	210	0.6	82	0.6	26	1.1
감성리	1.0	297	0.9	115	0.9	26	3.0
두만리	2.9	234	0.7	107	0.8	22	0.8
용담리	1.1	240	0.7	103	0.8	23	2.2
축산리	3.9	231	0.7	104	0.8	22	0.6
금천리	5.2	295	0.9	115	0.9	26	0.6
영치리	2.6	117	0.4	49	0.4	24	0.5
남곡리	3.1	83	0.3	44	0.3	19	0.3
황용리	2.7	233	0.7	93	0.7	25	0.9
영대리	6.4	308	0.9	138	1.1	22	0.5
달천리	3.8	221	0.7	107	0.8	21	0.6
박산리	2.0	138	0.4	60	0.5	23	0.7
대박리	2.3	232	0.7	107	0.8	22	1.0
부용리	5.1	217	0.7	85	0.7	26	0.4
장제리	1.0	94	0.3	38	0.3	25	0.9
호탄리	0.9	171	0.5	72	0.6	24	1.9
신촌리	1.0	345	1.1	122	1.0	28	3.5
도암리	2.5	319	1.0	115	0.9	28	1.3
성덕리	1.3	317	1.0	128	1.0	25	2.5
영곡리	2.8	313	1.0	117	0.9	27	1.1
대평리	0.0	-	-	-	-	-	-
금남면	54.6	8,950	27.3	3,544	27.8	25	1.6
연기군 주변지역	118.6	21,115	64.3	8,384	65.8	25	1.8
전체	223.9	35,394	100.0	13,613	100.0	26	1.6

주) 공주시, 청원군 주변지역은 2004년 말 기준으로, 연기군 주변지역은 200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임

(2) 지역산업

주변지역 내 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조치원지방 산업단지, 부용지방 산업단지), 농공단지(응암·농공단지) 각 2개소, 대규모 공장 11개소가 입지하고 있다.

산업단지 및 대규모공장의 업종별 주요생산품으로는 철강, 섬유, 조립금속, 석유화학, 목재, 석재, 전자, 자동차부품, 식품 등으로, 2004년 현재 총 종업원 수는 3,982인으로 주변지역 3개 산업별 시·군 총 종사자수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5〉 주변지역 산업단지 세부현황

구 분	준공일	사업면적(m ²)	입주업체(개소)	종업원수(인)	유치업종
계	-	1,827,793	38	2,936	-
조치원지방	'92.12	949,000	15	863	철강, 섬유, 조립금속 등
부용지방	'95. 6	565,000	12	1,326	석유화학, 조립금속 등
응암농공	'89. 3	116,793	10	503	목재, 전자, 조립금속 등
부용농공	'87.10	197,000	1	244	목재

〈표 2-6〉 주변지역 개별입지 대규모 공장 세부현황

상 호	위 치	생 산 품	면 적(m ²)		종업원수 (인)
			부 지	건 축	
계			590,072	129,284	1,046
대한교과서	동면 내판	교과서	241,459	24,439	188
프렘파스트	동면 명학	PB파이프	19,000	7,324	60
한국에프엠	동면 응암	자동차부품	32,470	11,831	165
대림콘크리트공업	서면 부동	인조대리석	39,699	8,173	52
신한일전기	서면 부동	선풍기	56,059	13,023	45
우림산업	서면 신대	액체황산 알미늄	25,355	4,903	40
조치원식품	서면 월하	통조림	28,053	10,121	88
국일방직	서면 부동	면사	22,522	13,254	130
새아침	서면 부동	만두속	40,355	15,087	225
풍림산업	남면 놀왕	강교박스	63,418	16,636	28
세림현미	금남 성덕	미강원유	21,712	4,493	25

(3) 생활환경

① 주 택

주변지역 총 가구수는 약 27,375호, 총 주택수는 20,599호로써 주택보급률은 75.1%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유형별로는 청원군을 제외한 아파트가 2004년 3,173호로 작년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단독 및 연립은 각각 14,015호 및 94호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주변지역에 지정된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 26.0%, 아파트 7.3%, 연립·다세대 1.2% 등의 순을 차지하고 있다.

〈표 2-7〉 주변지역 가구 및 주택현황

(단위: 가구, 호, %)

지 역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연기군	동 면	2,148	1,485	69.1
	서 면	3,141	2,222	70.7
	남 면	3,577	2,742	76.6
	금남면	4,251	2,705	63.6
	소 계	13,117	9,154	69.8
공주시	장기면	2,431	2,256	92.8
	반포면	2,202	1,523	69.2
	의당면	2,863	2,460	85.9
	소 계	7,496	6,239	83.2
청원군	부용면	2,902	2,301	79.2
	강내면	3,860	2,905	75.2
	소 계	6,762	5,206	77.0
합 계		27,375	20,599	75.2

자료 : 연기군·공주시·청원군, 시·군 통계연보, 2004

② 상·하수도

연기군 상수도보급률의 경우, 2004년 현재 55.3%로 점진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으나 1일 1인 급수량은 2003년 대비 26ℓ가 줄었고, 공주시는 보급률 60.6%로 전년대비 크게 향상된 바 없으나 1일 1인 급수량은 전년대비 21% 증가, 청원군의 경우, 2003년 현재 43.0%로 2002

년 대비 약 1%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1일 1인 급수량은 2002년 대비 25.6ℓ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현재 연기군의 총 시설용량 22,500톤, 급수량 20,568톤, 공주시는 총 시설용량이 30,500톤, 급수량 29,063톤, 2003년 현재 청원군의 총 시설용량은 98,500톤으로 급수량 14,838톤을 훨씬 웃돌아 3개시·군 모두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장래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급수량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는 2004년 기준 연기군은 46.2%, 공주시는 50.5% 처리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청원군은 2003년 기준 6.3%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표 2-8〉 주변지역 상수도 세부현황

(단위 : 인, %)

지 역		급수도시내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연기군	동 면	5,013	—	—
	서 면	8,508	680	7.8
	남 면	9,175	—	—
	금남면	10,768	4,751	44.1
공주시	장기면	7,213	2,141	29.6
	반포면	5,227	180	3.4
	의당면	7,551	2,616	34.6
청원군	부용면	8,091	6,086	75.2
	강내면	11,010	5,198	47.2

자료 : 연기군 · 공주시 · 청원군, 시 · 군 통계연보, 2004

〈표 2-9〉 주변지역 하수도 세부현황

(단위 : 인, %)

지 역		하수도시내총인구	하수인구	보급률
연기군	동 면	5,096	539	10.6
	서 면	8,683	787	9.06
	남 면	9,308	577	6.19
	금남면	10,840	220	2.02
공주시	장기면	—	—	—
	반포면	—	—	—
	의당면	—	—	—
청원군	부용면	8,091	—	—
	강내면	11,010	168	1.5

자료 : 연기군 · 공주시 · 청원군, 시 · 군 통계연보, 2004

③ 공원·녹지

2006년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내 녹지는 청원군 부용면에 시립녹지 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공원시설은 연기군 금남면, 동면에 각각 1개소, 공주시 장기·반포면 1개소, 청원군 강내면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총 5개의 체육, 국립공원이 있다.

현재 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었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관리와 도시공원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0〉 공원 및 녹지현황

구 분		공 원
연기군	금남면	체육공원 약 2,000평 (6,600㎡)
	남 면	—
	동 면	—
	서 면	고북군립공원
공주시	장기면	대전공원묘원
	반포면	국립공원 약 25.1km ²
	의당면	—
청원군	부용면	시립녹지 3,000㎡(철도옆)
	강내면	공원 약 150평(495㎡)

자료 : 국토연구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중간심의자료, 2006.

④ 교 육

2005년도 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7.7명으로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목표 연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초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교육시설의 여건을 고려한 확충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변지역 면 소재 교육시설 수는 유치원·초등·중등·고등·대학을 포함하여 총 57개소이며, 연기군 면 소재에는 고등·대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 인접한 조치원읍으로 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 현재 주변지역 면 소재 유아·초등·중등·고등학교의 총 재학생 수는 7,686인, 교직원 수는 550명으로 추정된다.

〈표 2-11〉 주변지역 면 소재 교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인)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연기군	금남면	2	1	1	조치원읍 1 개소	◦ 조치원읍 2 개소 ◦ 전 의 면 1 개소
	남 면	4	3	-		
	동 면	1	4	1		
	서 면	3	2	1		
공주시	장기면	2	2	1	-	2
	반포면	2	2	1	1	-
	의당면	3	3	-	-	-
청원군	부용면	1	2	1	-	-
	강내면	2	2	1	1	2

주) 청원군의 경우, 2004년 기준

자료: 시·군 통계연보 및 충남·북 교육청 2004, 2005(국·공립·실업고·특수학교포함)

4) 교통 여건분석

(1) 철 도

주변지역 동측으로 경부선과 경부고속철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경부선의 경우 내판역(지구중심에서 7km, 지구경계선에서 2km)과 매포역(지구중심에서 10km, 지구경계선에서 3.5km)을 통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지구중심에서 동측으로 8km 지점에 경부고속철도가 통과하고 있다. 또한 조치원역(지구중심에서 11km, 지구경계선에서 7km)을 통해 충북선을 이용할 수 있다.

(2) 고속국도

대상지 주변을 통과하는 고속국도는 총 3개 노선으로서, 청원 I.C (지구중심점에서 14km, 지구경계선에서 7.5km)를 통해 경부고속국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북대전 I.C(지구중심점에서 14km, 지구경계선에서 9km)를 통하여 호남고속국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안 I.C(지구중심점에서 18km, 지구경계선에서 13.5km)를 통해 논산-천안고속국도를 이용할 수 있다.

2008년에 준공예정인 당진~대전간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북유성 I.C (지구중심에서 9km,

지구경계선에서 4.5km)를 중심으로 고속국도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일반국도

대상지 주변의 국도1호선(조치원~대전)이 지구내를 통과하고 있으며, 국도36호선(공주~장기)이 국도1호선과 연결된다.

국지도96호선(청원IC~공주)과 지방도 651호선(부강~금남)이 현재 대상지의 주요 진입도로 이용되고 있다.

(4) 공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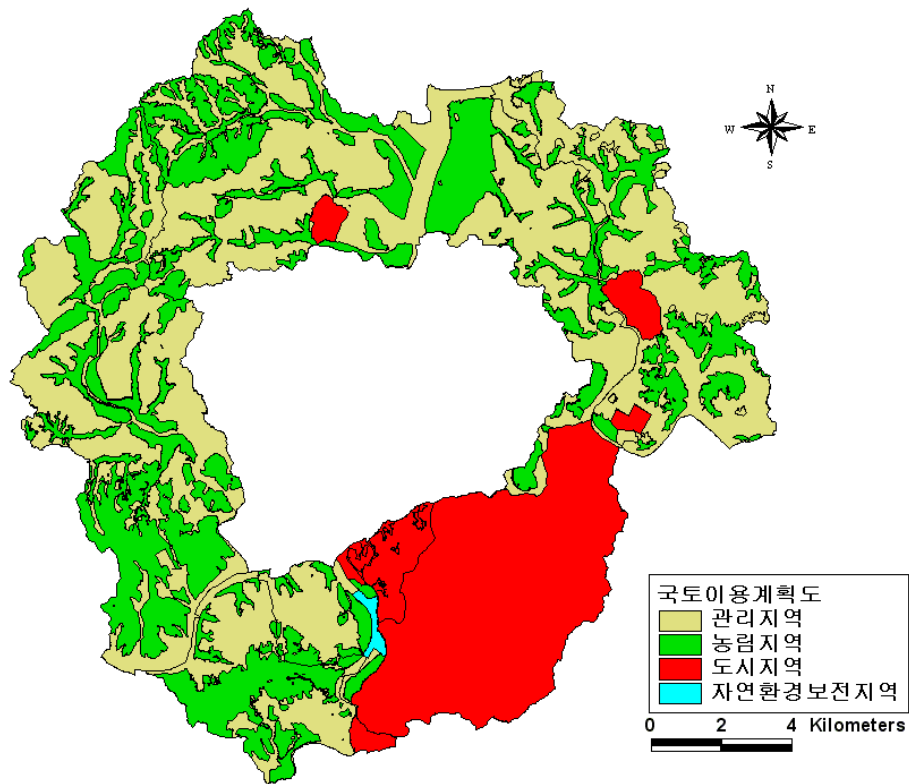
청주공항은 지구중심점으로부터 30km(지구경계에서 3km) 거리에 입지, 중부고속국도 오창I.C와 경부고속국도 청원I.C와 신설되는 남측 고속화도로를 이용하여 접근가능하고, 인천공항은 지구중심점으로부터 150km지점에 위치, 서해안고속국도 당진I.C 및 당진~대전간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다.

주변지역에서의 광역접근성은 동측으로 경부고속도로(약 6km), 경부고속철도(약 3km)가 통과하고 서측으로 천안~논산간고속도로(약 10km)가 위치, 청주공항이 약 24km에 위치하며 예정지역 서측으로 국도1호선이 남측으로는 당진~대전간고속도로가 공사중에 있으며 오송역에서 분기한 호남고속철도는 예정지역 동남측에 계획되어 있다.

5)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1) 용도지역 현황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별로 분석해보면, 도시지역은 전체면적의 20.6%인 46.15km²이며, 농림지역은 72.13km²(32.2%), 관리지역은 105.33km²(47.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0.58km²(0.3%)을 차지하고 있어 관리지역의 면적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2-8] 국토이용계획도

(2)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지목별로는 임야가 약 120.4km²로 주변지역 전체면적의 62.6%를 차지하며 농경지인 전·답이 약 56.3km²로 29.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대지가 약 5.8km²(3.0%), 공장용지가 약 3.6km²(1.9%), 주유소·창고용지 등이 약 10만m², 묘지가 약 0.5km² 정도 분포하고 있다.

(3)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은 임야가 약 116km²로 주변지역 전체면적의 60.5%를 차지하여 시·군 전체

비중에 비해 다소 낮고, 전·답은 약 60.2km²로 31.3%를 차지해 더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주거용 토지인 단독·연립·다세대·아파트는 약 5.2km²로 2.7%를 차지하며, 특히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은 반면, 상업용·업무용·주상용·공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약 4.5km²로 2.4%를 차지하고 있다.

(4)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① 주거지역

주변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 30.7%(약 0.2km²), 아파트 9.9%, 연립·다세대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전답이 17.6%(약 0.1km²), 상업용·업무용·주상용·공업용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공장용지는 청원군 주변지역에만 소규모(약 8,400m²) 분포되어 있다.

② 녹지지역

주변지역의 녹지지역에는 전·답이 약 1.0km²(48.2%), 임야가 약 0.2km²(10.6%)로 거의 60%를 차지하고,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33.0%(약 71만m²)에 달하고 있다. 특히 연기군 주변지역의 단독주택 분포비율은 다른 시·군보다 높다.

③ 관리지역

주변지역 내의 관리지역에는 임야 약 47.0km²(55.3%), 전·답 약 26.8km²(31.5%)를 차지하고,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단독·연립·다세대·아파트는 약 3.9km²(4.6%), 공업용은 약 2.4km²(2.8%) 정도 분포되어 있다. 주변지역중 연기군 관리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공업용지(약 1.3km²)로 이용되고 있는 비율이 높다.

④ 농림지역

주변지역의 농림지역은 임야가 약 41.5km²로 주변지역 전체 농림지역 면적의 63.8%, 답이 약 20.2km²로 31.1%, 전이 약 2.5km²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변지역 농림지역 내 임야의 52.9%가 공주 주변지역에 분포하고, 답의 63.4%가 연기 주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6) 마을공동시설 현황 및 생활여건·생산기반 수준 분석 : 이장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 마을공동시설 설치현황

주변지역 마을공동시설의 설치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리사무소 등 36개 공동시설에 대해 3개 유형(기설치, 설치중, 미설치)으로 구분하고 설문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기설치된 비율이 높은 공동시설은 노인회관(80.0%), 마을회관(75.4%), 간이상수도(50.8%), 경지정리(49.2%), 수리시설(43.4%) 등인 반면, 공동건조장(4.7%), 공동작업장(7.8%), 공동집하·출하장(7.1%) 등은 설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적인 복지·문화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반면, 마을쉼터, 공동목욕탕, 오락시설 등 한 차원 높은 복지·문화시설의 설치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농가경영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농업공동시설의 설치비율도 낮은 수준이다.

마을공동시설의 설치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연기군은 간이상수도, 마을버스, 마을회관, 노인회관, 마을공동마당, 학교버스,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의 설치비중이 높고, 공주시는 마을쉼터, 초고속인터넷망, 마을회관, 노인회관, 일용품판매점, 수리시설 등의 설치비중이 높으며, 청원군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하수도, 약국, 보건지소, 도서관 등의 설치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변지역 마을들은 기초적인 문화·복지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농업과 관련된 공동시설 설치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2〉 마을공동시설 설치여부

(단위 : 마을, %)

공동시설	합계	기설치		설치중		미설치	
		빈도	%	빈도	%	빈도	%
리 사 무 소	128	55	43.0	3	2.3	70	54.7
마 을 쉼 터	131	26	19.8	6	4.6	99	75.6
상 수 도	131	48	36.6	5	3.8	78	59.5
간 이 상 수 도	124	63	50.8	7	5.6	54	43.5
하 수 도	132	35	26.5	13	9.8	84	63.6
마 을 하 수 도	129	40	31.0	14	10.9	75	58.1
오 수 처 리 시 설	131	12	9.2	10	7.6	109	83.2
쓰 레 기 처 리 장	129	2	1.6	2	1.6	125	96.9
초고속인터넷망	131	40	30.5	11	8.4	80	61.1
마 을 버 스	126	35	27.8	4	3.2	87	69.0
마 을 회 관	130	98	75.4	7	5.4	25	19.2
노 인 회 관	131	106	80.9	7	5.3	18	13.7
어 린 이 놀 이 터	128	14	10.9	3	2.3	111	86.7
탁 아 소	127	2	1.6	—	0.0	125	98.4
공 동 목 욕 탕	128	9	7.0	—	0.0	119	93.0
생 활 체 육 시 설	127	15	11.8	—	0.0	112	88.2
마 을 공 동 마 당	130	36	27.7	3	2.3	91	70.0
일 용 품 판 매 점	129	26	20.2	1	0.8	102	79.1
약 국	132	19	14.4	—	0.0	113	85.6
보 건 지 소	132	22	16.7	2	1.5	108	81.8
도 서 관	132	11	8.3	1	0.8	120	90.9
오 락 시 설	131	17	13.0	—	0.0	114	87.0
학 교 급 식 시 설	131	26	19.8	3	2.3	102	77.9
학 교 버 스	129	43	33.3	5	3.9	81	62.8
유아, 유치원	131	24	18.3	3	2.3	104	79.4
경 지 정 리	128	63	49.2	7	5.5	58	45.3
수 리 시 설	129	56	43.4	8	6.2	65	50.4
하 천 정 비	130	38	29.2	13	10.0	79	60.8
공 동 작 업 장	129	10	7.8	1	0.8	118	91.5
공 동 건 조 장	129	6	4.7	1	0.8	122	94.6
공 동 창 고	129	23	17.8	3	2.3	103	79.8
공 동 저 장 고	128	10	7.8	—	0.0	118	92.2
공동집하,출하장	127	9	7.1	—	0.0	118	92.9
농 기계 보 관 소	129	25	19.4	3	2.3	101	78.3
정 미 소	130	21	16.2	2	1.5	107	82.3
농산물가공공장	130	8	6.2	2	1.5	120	92.3

(2) 생활여건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변지역의 마을별 생활여건 및 마을공동시설의 확충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24개 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도로·마을안길·교량·주차장, 오수·쓰레기처리시설, 주택개량, 농촌부업 등 농외소득기회, 건강관리시설, 마을지도자육성, 젊은 농민의 귀농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3〉 생활여건 및 생산기반 확충 필요성

생활여건 및 생산기반	빈도	평균점수
도로·마을안길·주차장 확충	129	1.90
마을공원 조성	129	2.16
상·하수도 확충	127	2.15
소하천·구거 및 배수시설 정비	128	2.07
오수 처리 및 쓰레기 처리장	128	1.98
텔레비전 수신 및 인터넷망확충	129	2.16
마을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	127	2.42
주택개량 확대	129	1.96
마을회관·경로당·어린이놀이터	129	2.18
병원·보건지소 등 의료시설	127	2.36
문화·오락시설 확충	128	2.18
교육기자재·학교급식시설확충	126	2.67
통학버스 운행 확충	128	2.35
경지정리·수리시설·하천정비	128	2.34
공동작업장·공동건조장	125	2.39
농·임산물창고, 농기계보관창고	125	2.08
농로·임도시설 확충	125	2.18
농·임산물 가공시설 설치	126	2.58
영농정보·기술의 제공·교육	125	2.27
농촌관광사업 지원	126	2.47
농촌부업 등 농외소득기회 증대	127	1.83
건강관리시설 확충	129	1.81
마을지도자 육성	128	1.99
젊은 농민의 귀농	128	1.98

주) 1.매우필요 2.필요 3.보통 4.불필요 5.전혀불필요

시군별로 보면 연기군은 주택개량, 마을지도자 육성, 공주시는 도로·마을안길·교량·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구거 및 배수시설, 경지정리·수리시설·하천정비, 농촌부업 등 농외소득기회, 청원군은 도로·마을안길·교량·주차장, 농촌부업 등 농외소득기회, 건강관리시설 확

층, 젊은 농민의 귀농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마을의 기초적 생활환경시설, 농가소득향상, 농업에 종사할 젊은 농민확보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7) 종합

인문사회환경 분석결과 주변지역은 대규모 집단취락지역과 전형적인 농촌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도시와의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고, 교통망이 발달하고 있어 대도시 및 타지역과의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이다. 조립금속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비교적 발달한 지역이고, 단독주택중심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은 비교적 낮다.

주변지역의 용도지역은 대부분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목별로는 임야비중이 높으나 군 평균보다는 다소 낮다.

이와 같이 농림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면적이 많아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영농활동 등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변지역 이장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시설 설치, 생활여건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주변지역 마을들은 기초적인 문화·복지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농업과 관련된 공동시설 설치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변지역 마을들은 기초적 생활환경시설, 농가소득향상, 농업에 종사할 젊은 농민확보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주변지역 관리현황

주변지역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에서 정한 다양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존치구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취락지구, 산업단지 등이 포함된다. 존치구역은 개발목적과 보전목적의 존치구역 등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표 2-14〉 주변지역내 기존구역 등 총괄개요

(단위 : m²)

구 분	세 부	합 계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도 시 지 역	소 계	45,493,990	42,801,990	817,000	1,875,000
	주 거	943,851	330,851	—	613,000
	상 업	121,000	31,000	—	90,000
	공 업	319,000	—	—	319,000
	녹 지 (개발제한구역)	44,110,139 (42,288,520)	42,440,139 (41,480,000)	817,000 (808,520)	853,000
관 리 지 역	—	105,990,000	38,580,000	44,289,000	23,121,000
농 립 지 역	—	71,871,604	30,192,004	31,382,000	10,040,000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금강상수원 보호구역	644,000	644,000	—	—
산 업 단 지	—	1,827,793 (4개 산단)	1,065,793 (조치원지방, 응암농공)	—	762,000 (부용지방, 부용 농공)
물 류 단 지	중부권 내륙화물	694,214	363,636 (응암)	—	330,578 (갈산)
취 락 지 구	자연취락 (G.B 해제지역)	487,480 (17개지구)	487,480 (17개지구)	—	—
	집단취락 (G.B. 내)	139,300 (9개지구)	139,300 (9개지구)	—	—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제1종 (G.B 해제지역)		836,910 (11개구역)	—	—
	제2종	주거	779,601 (4개지구)	—	—
		산업	599,162 (9개지구)	88,475 (남양유업)	167,000 (5개공장)
		특정	420,300 (3개지구)	—	331,300 (공원묘원, 연수원)
문 화 재 보 호 구 역	—	119,066 (11개구역)	52,549 (7개구역)	—	66,517 (4개구역)
군 사 시 설 보 호 구 역	—	39,883,000	35,660,000 (R505, R532)	3,060,000 (32사령부)	1,163,000 (제1보급창)
농 업 진 흥 지 역	농업진흥구역	33,567,9174	18,189,290	7,924,852	7,453,772
	농업보호구역	2,619,292	972,719	1,010,151	686,422
산 지	보전산지	63,049,537	34,558,000	23,406,000	5,085,537
	준보전산지	38,553,122	10,732,000	16,215,000	11,606,122

1) 지구단위계획 구역

주변지역에는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되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취락이 총 11곳이며, 이 구역은 총 면적이 0.8km²이고 772호가 거주하고 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모두 연기군 금남면에 분포해 있고 존치구역으로 협의되었다.

〈표 2-15〉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2004.4.2. : 그린벨트해제, 50호 이상)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호 수
계	11개 취락		836,910	772
1	학마을	금남면 감성리	100,010	91
2	동창	금남면 호탄리	101,310	74
3	남곡	금남면 남곡리	48,950	50
4	원달전-닭재	금남면 달전리	68,030	68
5	윗말	금남면 대박리	82,790	83
6	두만	금남면 두만1리	74,230	75
7	발림이	금남면 발산리	73,300	68
8	신촌-화사	금남면 신촌리	104,820	88
9	울여울	금남면 영대2리	62,290	53
10	비룡(대)	금남면 용담1리	66,470	67
11	쇠내	금남면 금천1리	54,710	55

자료 : 국토연구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중간심의자료, 2006.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거형 4곳, 산업형 6곳, 특정형 3곳으로 총16 곳이며 주거형은 연기군 주변지역, 산업형은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주변지역, 특정형은 공주시, 청원군 주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비해 취락수는 적지만 호수는 2배 이상이며 명학리와 봉암리에는 임대APT가 입지해 있다.

연기군 주변지역에 있는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존치구역으로 협의되었다.

〈표 2-16〉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호 수
소계	4개 취락		779,061	1,855
1	명학지구	동면 명학리	20,387	313
2	봉암1지구	서면 봉암리	420,000	500
3	봉암2지구	서면 봉암리	25,000	509
4	연기지구	남면 연기리	313,674	533

자료 : 국토연구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중간심의자료, 2006.

〈표 2-17〉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읍 면	업 체 명	사업면적(m ²)	주생산품	종업원수	비 고
계	9개	599,162		3,742	
장기면	남양유업	88,475	유제품	671	산업촉진지구
강내면	청원산업	34,000	VR흡관	18	
	일신유화	26,000	계면활성제	24	
	한솔제지	60,000	백판지	176	
부용면	쌍용양회	19,000	시멘트	15	
	화승AP	28,000	자동차용 고무제품	55	
남면	풍만제지	155,787	백상지, 아트지	183	
서면	신신화학	38,000	인조가죽	95	
동면	삼성전기	149,900	PCB	2,505	

자료 : 국토연구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중간심의자료, 2006.

〈표 2-18〉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특정형)

읍 면	업 체 명	사업면적(m ²)	주생산품	종업원수	비 고
계	3개	420,300	—	—	—
부용면	실크리버CC	89,000	골프장	—	시설용지지구
장기면	대전공원묘원	276,000	공원묘원	—	
	농협충남연수원	55,300	연수원	—	

자료 : 국토연구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중간심의자료, 2006.

2) 집단취락 현황

(1) 존치구역 내 집단취락 지역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 된 취락지구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취락지구는 총 17곳으로 508호가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는 총 9곳으로 114호가 모두 존치구역으로 협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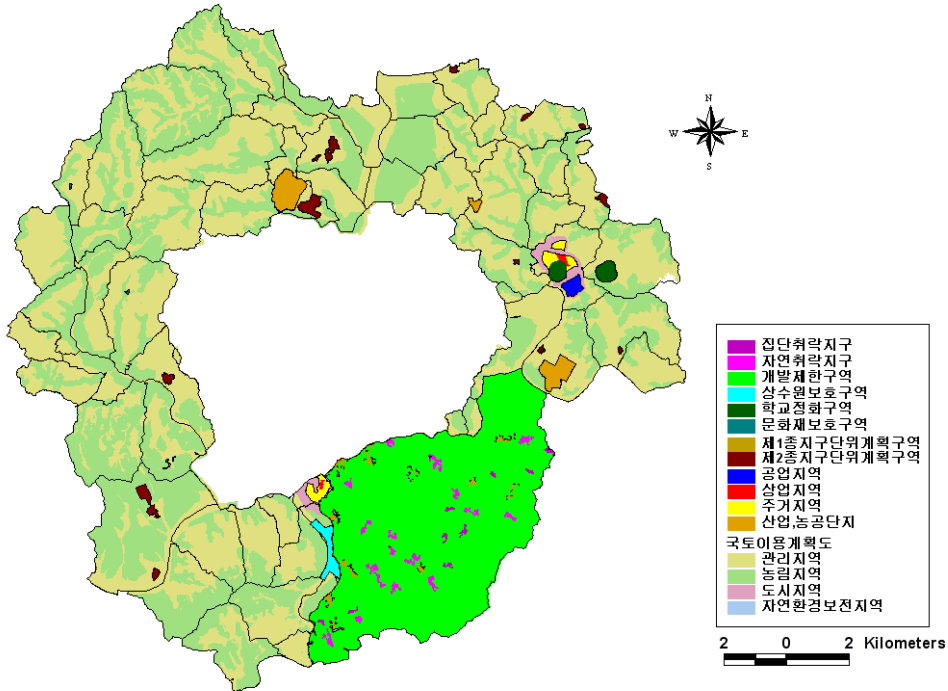
〈표 2-19〉 취락지구현황

구 분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호 수
합 계	26개 취락	—	—	626,780		
소 계	17개 취락	자연취락	—	487,480	2004.4.2	508
GB 해제 지역	황산	"	금남 금천1리	37,750	"	40
	학봉	"	금남 금천2리	40,120	"	44
	당미-사당채	"	금남 황룡2리	45,850	"	46
	박산	"	금남 박산리	41,080	"	42
	고추골	"	금남 신촌리	21,360	"	22
	안골	"	금남 영치리	25,870	"	26
	평촌	"	금남 용담2리	38,000	"	38
	정말	"	금남 축산리	19,230	"	20
	부영말	"	금남 축산리	30,940	"	35
	장재	"	금남 장재리	29,070	"	31
	봉천	"	금남 축산리	26,780	"	27
	산동	"	금남 두만리	25,330	"	27
	삼박골	"	금남 영대2리	24,080	"	24
	성동	"	금남 달전리	20,090	"	21
	불곡	"	금남 영치리	19,060	"	20
	사양	"	금남 영치리	20,680	"	22
	양달둔대-상평	"	금남 영대1리	22,190	"	23
소 계	9개 취락	집단취락	—	139,300		114
GB내	서태	"	금남 영대1리	19,360		15
	고래뜰	"	금남 박산리	19,190		16
	청룡안	"	금남 영대1리	16,710		14
	건배	"	금남 영대2리	14,400		14
	중뱅이	"	금남 금천2리	15,400		12
	계양이	"	금남 영대1리	15,560		12
	새터말	"	금남 달전리	13,180		11
	비룡(소)	"	금남 용담1리	12,570		10
	새암골	"	금남 두만리	12,930		10

주) 자연취락지구(20~49호) : 그린벨트 해제지역, 집단취락지구(10~19호) : 그린벨트 내
자료 : 국토연구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중간심의자료, 2006.

위에서 제시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04. 4. 2 : G.B.해제, 50호이상) 11개 취락 772호를 더하면, 주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관련 취락지구는 총 37개소 1394호에 달한다.

주변지역내 집단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의 개발목적의 존치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보전목적의 존치구역의 공간적 분포도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2-9] 존치구역 분포도면

자료 : 국토연구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중간심의자료, 2006.

(2) 존치구역 이외의 집단취락 지역

존치구역으로 협의되지 않은 일반 집단취락은 총 83개로 3,220호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존치구역으로 협의된 취락보다 2배 이상 많다. 연기군 주변지역에 2,102호 65.3%가 분포하고, 공주시 주변지역에 723호 22.5%, 청원군 주변지역에 395호 12.3%가 분포하고 있다.

3) 문화재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은 총 11개로 연기군, 청원군 주변지역에 분포하고, 존치협의를 된 문화재는 총 4개로 공주시 주변지역에 분포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4개로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주변지역에 각각 분포하고 있다.

〈표 2-20〉 문화재 보호구역

구 분	위 치	면적(m ²)	비 고
계		119,066	11개
연화사	서면 월하리	2,360	보물 649,650호
효교비	서면 기룡리	290	도 기념물
송룡마애불	동면 송용리	102	도 문화재자료
연기향교	남면 연기리	2,579	도 기념물
매죽헌 사후문절사	금남면 달전리	656	도 문화재자료
백로서식지	금남면 감성리	45,719	도 기념물
화순최씨 참판공제실	금남면 도암리	843	도 문화재자료
부강초등학교강당	부용면 부강리	2,482	도 유형문화재
유계화가옥	부용면 부강리	3,319	국 민속자료
청원남성골산성	부용면 부강리	58,167	도 기념물
보만정 및 검단서원묘정비	부용면 금호리	2,549	도 문화재자료

자료 : 국토연구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중간심의자료, 2006.

〈표 2-21〉 문 화 재

구 분	위 치
계	4개
김종서장군 묘	장기면 대교리 산45
덕천군사우	장기면 태산리 101
남산영당	반포면 성강리 201
영평사	장기면 선학리 산 21외 16필지

자료 : 국토연구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중간심의자료, 2006.

〈표 2-22〉 군사시설보호구역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39,883,000	4개
32사단 사령부	반포면 국곡리	3,060,000	
육군 제1보급창	부용면 부강리	1,163,000	37사단 관할
군용항공기지구역R505	서면 월하리 외	20,900,000	항공부대
군용항공기지구역R532	서면 월하리 외	14,760,000	육군항공학교

자료 : 국토연구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중간심의자료, 2006.

3) 종합

주변지역 내 존치구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취락지구, 산업단지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반면, 개발제한구역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존치구역의 관리는 개별법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개발이 용이한 점이 있으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 또한 상당한 행위제한을 수반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비존치구역은 현재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농림어업 등 생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주택의 증축 등만 허용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난개발의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 주변지역 관리·지원제도 검토

1. 용도지역·지구 허용행위 및 건축밀도 현황

1) 용도지역 및 지구의 유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용도지역을 세분하면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용도지역 및 지구의 허용행위

(1)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허용행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⁴⁾, 초·중·고등학교, 복지시설이고, 조례에 위임한 허용행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⁵⁾,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장, 업무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식물관련 시설, 공공시설 등이 다.

〈표 3-1〉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허용행위

구 분	허용 범위
시행령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초·중·고등학교, 복지시설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만 가능 ※제2종일반주거지역: 15층 이하만 가능
조례 위임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장, 업무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식물관련시설, 공공시설

- 4) 슈퍼마켓, 일용품 등 소매점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5)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류 제2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금융업소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류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2)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행위는 시행령에서 공동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 공공용시설 등이
고, 조례위임 허용행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장,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다.

〈표 3-2〉 일반상업지역에서의 허용행위

구 분	허용 범위
시행령	공동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 공공용시설 등
조례 위임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장,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3)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에서의 허용행위는 시행령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및영업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등이고, 조례
에 위임한 허용행위는 단독주택,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동·식
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 등이다.

〈표 3-3〉 일반공업지역에서의 허용행위

구 분	허용 범위
시행령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및영업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등
조례 위임	단독주택,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동·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 등

(4) 생산·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에서의 허용행위는 시행령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로써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충등학교, 운동장, 창고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동·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 등이고, 조례로 위임한 행위제한은 연립·다세대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고등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운동시설(운동장제외), 숙박시설, 공장(도정공장·식품가공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이다.

〈표 3-4〉 생산·자연녹지지역에서의 허용행위

구 분	허용 범위
시행령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충등학교, 운동장, 창고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동·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 등(4층이하만 가능)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운동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가능
조례 위임	연립·다세대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고등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운동시설(운동장제외), 숙박시설, 공장(도정공장·식품가공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4층이하만 가능)

(5)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시행령에서는 4층 이하 건축물로써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 묘지관련시설 등이고, 조례에 위임한 허용행위는 공동주택(아파트제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다.

〈표 3-5〉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허용행위

구 분	허용 범위
시행령	단독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 묘지관련시설(4층이하 건축물)
조례 위임	공동주택(아파트제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6) 농림지역

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시행령에서는 농어가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소 등이고, 조례에 위임한 허용행위는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 묘지관련시설 등이다.

〈표 3-6〉 농림지역에서의 허용행위

구 분	허용 범위
시행령	농어가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소
조례 위임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 묘지관련시설

(7)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시행령에서는 농어가단독주택, 초등학교이고, 조례에 위임한 허용행위는 제1·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양어시설, 발전소, 묘지관련시설 등이다.

〈표 3-7〉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허용행위

구 분	허용 범위
시행령	농어가단독주택, 초등학교
조례 위임	제1·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양어시설, 발전소, 묘지관련시설

(8)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은 시행령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로써 단독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1차산업관련 창고시설, 동·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 등이고,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병원,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등이다.

〈표 3-8〉 자연취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구 분	허용 범위
시행령	단독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1차산업관련 창고시설, 동·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 등(4층 이하만 가능)
조례 위임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병원,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주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용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변지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관리지역, 농림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단독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 묘지관련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하다.

3)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밀도 현황

(1) 용도지역내 건폐율

용도지역내 건폐율은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법에

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과 시·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건폐율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70%이하, 상업지역 90%이하, 공업지역 70%이하, 녹지지역 20%이하, 관리지역은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각20%이하, 계획관리지역 40%이하, 농림지역 2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이하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군 조례로 정한 용도지역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표 3-9〉 용도지역별 건폐율

(단위 : %)

구 분			시행령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제1종일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제2종일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상업 지역	일반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공업 지역	일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녹지 지역	보전녹지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자연취락지구:30이하)	20 이하
		생산녹지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자연취락지구:30이하)	20 이하
		자연녹지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자연취락지구:40이하)	20 이하
관리 지역	보전관리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생산관리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계획관리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농림지역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 용도지역내 용적률

용도지역내 용적률 또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과 시·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용적률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500%이하, 상업지역 1,500%이하, 공업지역 400%이하, 녹지지역 100%이하, 관리지역은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각80%이하, 계획관리지역 100%이하, 농림지역 8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이하 등으로 정하고 있다.

〈표 3-10〉 용도지역별 용적률

(단위 : %)

구 분			시행령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도시 지역	주거지역	제1종일반	100~200	200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일반	150~250	250 이하	220 이하	250 이하
	상업지역	일 반	300~1300	1300 이하	800 이하	1300 이하
	공업지역	일 반	200~350	350 이하	250 이하	350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	50~80	80 이하	50 이하	80 이하
		생산녹지	50~100	10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자연녹지	50~100	10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관리 지역	보전관리		50~80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생산관리		50~80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계획관리		50~100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농림지역			50~80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50~80	80 이하	50 이하	80 이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주변지역에서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시행령과 연기군·공주시·청원군 조례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고, 용적률도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시행령과 연기군·공주시·청원군의 조례가 동일하다. 그러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시행령과 3개 시·군조례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있다.

2. 주변지역 행위제한 검토

1) 용도구역 유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한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제는 전국의 시군단위 토지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지역, 지구와는 별도로 필요에 따라 어떤 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독자적

인 규제이다.

용도구역은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자원보호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구분한다. 다시 말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토지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용도구역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표 3-11〉 용도구역별 지정목적

용도구역		지정목적
개발제한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 보안상 도시개발의 제한
시가화조정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 계획적·단계적인 개발도모 • 일정기간 시가화의 유보
수산자원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 공유수면 또는 그에 인접된 토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의 합리화·구체화 •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확보
	제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의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 •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건축물 용적률)의 완화

따라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기존 도시 내에 지정하는 반면, 용도구역은 기존도시 주변에 지정하는 특징이 있다. 본 절에서는 행정도시주변지역과 관련 있는 시가화조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용도구역 행위제한

(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의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1항에 의하면, “시가화조정구역”이라 함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말하며,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시가화조정구역내 행위제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8조에는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할 수 있는 행위

가. 법 제8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해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건축
 -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 포함),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 포함), 관리용 건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 이하인 것, 양어장

나. 법 제81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해 할 수 있는 행위

- 주택 및 그 부속건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
 -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 증축, 재축 또는 대수선)
-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 새마을회관의 설치
- 기존정미소(개인소유 포함)의 증축 및 이축(시가화조정구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
공사업으로 인하여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 정자 등 간이휴게소 설치
-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 포함)의 설치
- 선착장 및 물량장의 설치
-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
한 시설의 설치
 -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 보건소·경찰파출소·소방파출소·우체국 및 읍·면·동사무소의 설치
 - 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초소·대피소 및 공중화장실
과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의 공동구관
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 교정시설의 설치
 -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
공공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
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축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
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에 해당하는 면적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 공장부지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 기존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 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 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위사용가스판매점, 일반음식점, 다과점, 다방,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목욕탕, 사진관, 목공소, 의원, 약국, 접골시술소, 안마시술소, 침구시술소, 조산소, 동물병원, 기원, 당구장, 장의사, 탁구장 등의 간이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81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해 할 수 있는 행위

-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농업·임업 및 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의 합병 및 분할

②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시행령 제89조 3항 관련)

- 제52조 제1항 및 각호 제53조 각호의 경미한 행위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축사의 설치 : 1가구(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당 기존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 이하(나환자촌의 경우에는 500㎡ 이하). 다만, 과수원·초지 등의 관리사 인근에는 100㎡ 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퇴비사의 설치 :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
 - 잡설의 설치 : 뽕나무밭 조성면적 2,000㎡당 또는 뽕나무 1천 800주당 50㎡이하
 - 창고의 설치 : 시가화조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0.5% 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 이하로 한다.
 - 관리용건축물의 설치 :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 또는 원예단지안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0.5%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이하
- 건축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건축신고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행위

3) 개발제한구역

(1) 개발제한구역 지정 의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

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원칙적 금지행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②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

-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에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농로·제방·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실외체육시설
 -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로서 지정된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벌채면적 500㎡ 또는 벌채수량 5㎥ 이상 죽목의 벌채
- 분할된 후 필지의 면적이 200㎡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이상)인 토지의 분할

③ 신고로 할 수 있는 행위

- 주택 및 근린생활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경우
-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경우
- 근린 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제외
- 벌채면적 300㎡이상 500㎡미만 또는 벌채수량 3㎥ 이상 5㎥미만의 죽목의 벌채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기존의 공장·제조업소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가설천막 설치
-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

(3) 지정현황

행정도시 주변지역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전체면적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연기군에 속하는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36.5km²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2〉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단위 : 개, 만㎡, %)

구 분	개발제한구역	
	필지수	면적
공주시(반포면)	179	66.5
	(4.6)	(4.1)
연기군(금남면)	8,336	3,654.0
	(23.3)	(36.1)
계	8,515	3,720.5
	(13.3)	(19.3)

4) 시가화조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비교

시가화조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지정근거, 주요가능행위 등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3〉 시가화조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등 비교

구분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방지와 도시의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지정근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9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제38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주요 가능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중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생산시설, 관리용건축물, 양어장 • 주택의 증축(100㎡ 이하), 부속건축물의 건축(33㎡이하에 해당되는 면적의 신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 • 새마을회관, 간이휴게소, 농기계수리소, 선착장, 농로, 사방시설의 설치 등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 공공도서관, 전신전화국,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의 설치 등 공익시설·공공시설의 일부 • 지정당시 이미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 기존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동일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 공장상호간의 업종변경,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일정 용도변경행위 •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채취와 기타 가능한 건축물 건축 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 경미한 행위 • 도시계획사업중 국방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도로, 하천, 주차장, 항만, 하수도, 공항, 공동묘지 등 공공용시설 • 축사, 잠실, 양어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퇴비사, 온실, 창고, 담배건조실 등 농림수산물, 보관관련 시설 및 관리용 건축물 •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단독주택의 신축 및 기존주택의 증축(원거주자 90평, 5년이상 거주자 70평, 기타 60평) • 슈퍼마켓, 음식점, 이용원, 의원, 부동산중개업소 등 근린생활시설의 증축 및 신축 • 마을진입로, 마을공동주차장, 공판장, 마을공동회관 등 마을공동 이용시설 • 등산로, 배구장, 테니스장, 야외수영장, 골프장 및 골프장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등 실외체육시설 • 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도시공원, 문화예술회관 등 여가활용시설 및 국방 군사에 관한 시설 • 학교(대학은 제외),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영농목적의 토지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형질변경

5) 시가화조정구역과 타 구역의 행위제한 비교

시가화조정구역과 타 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즉, 시가화조정 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보전산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과 비교하여 제한이 약한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비슷하거나 제한수준이 강하다.

〈표 3-14〉 시가화조정구역과 타 구역의 행위제한 비교

구 분	시가화조정구역	개발 제한 구역	농업 진흥 구역	상수원 보호 구역	보전 산지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주 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축: 금지 증축: 제한적 허용(기존주택면적 포함 100m³이하) 부속건축물: 기존건축물 면적을 포함하여 33m³ 이하 신축·증축·재축·대수선 허용 	●	●	●	●	●	●
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축: 금지 증축: 금지 용도변경: 공장·주택 등 신축 금지된 시설의 용도변경 허용 	●	△	△	△	●	●
공장(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축: 금지 증축: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및 수출 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기존시설 연면적의 100%이하) 부대시설: 구역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기존 공장 부지에 한함) 	△	○	□	○	●	△
공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축·증축: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 보건소, 경찰파출소, 공공도서관, 직업훈련소, 우체국, 동사무소, 환경오염방지시설, 교정시설, 아외음악당, 아외극장, 사회복지시설 등 	△	△	□	△	○	△
종교·문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축: 금지 증축: 구역지정 당시의 연면적의 200%까지 허용(새로운 대지 조성은 허용되지 않음) 	△	△	△	●	●	●
농·수산업 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축·증축: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생산시설, 관리용건축물 33m³이하, 양어장 	△	○	△	○	●	□
주민공동 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축·증축: 새마을회관, 정자 등 간이 휴게소, 농기계용 유류판매소 증축: 기존정미소의 증축 	○	△	△	□	○	△

※ 시가화조정구역을 용도구역 등과 비교할 경우의 제한 수준

● 시가화조정구역의 제한이 아주 높음 ○ 제한 높음 △ 제한 비슷함 □ 제한 낮음

3. 주변지역 지원제도 검토

1) 주민지원제도의 유형

현행 주민지원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지원제도를 포함하여 총 16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종합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단순히 특정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2개의 주민지원제도가 있다.

「접경지역지원법」과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은 지역종합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동·식물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은 오수·분뇨 정화시설의 설치에 한정된다.

12개의 주민지원제도는 주민지원사업의 명칭·대상지역·지원성격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5〉 현행 주민지원제도

대 상 지 역	근 거 법 률
주변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상수원관리지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상수원관리지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상수원관리지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상수원관리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자연공원구역	자연공원법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주변영향지역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댐주변지역	

2)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지원제도

(1) 법적 근거

2005. 3. 18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2) 목적 및 성격

지원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예정지역과 연접하여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안에서의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에 대한 계획보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

(3) 지원기관 및 지원대상

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지원사업의 시행은 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이다.

지원대상은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4) 지원사업의 종류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생활편익사업·복지증진사업·소득증대사업으로 나누어지며, 그 밖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를 위하여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표 3-16〉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사 업 종 류	세 부 지 원 방 법
생활편익사업	•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그 부대사업
복지증진사업	• 주택개량,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정비 및 그 부대사업
소득증대사업	• 주변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그 밖의 사업	•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복지증진 또는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지원사업절차 및 지원기준

① 지원사업절차

가.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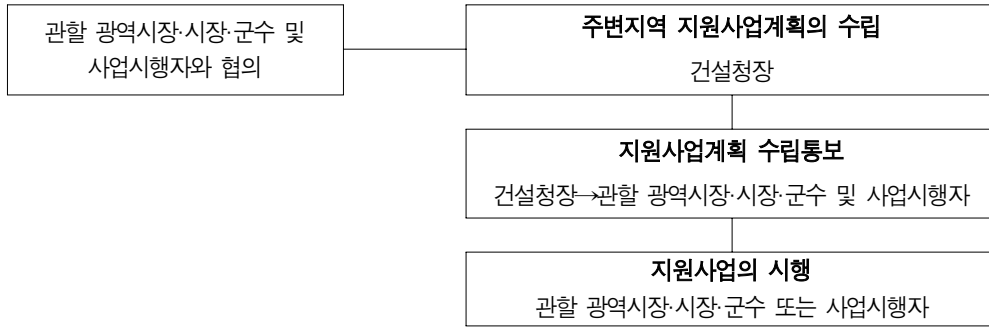
건설청장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건설청장은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지원사업계획의 통보

건설청장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다. 지원사업의 시행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관할 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그림 3-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지원사업 절차

② 지원기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및 시행령」에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6) 재원조달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에 지출한다. 특별회계는 건설청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으로 한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청사·부대시설 및 그 부지의 매각대금·사용료·임차보증금회수금 및 당해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둘째,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셋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넷째, 차입금, 출자 및 용자로 인한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이다.

4. 주민지원제도의 주요내용

1) 목적

우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민지원제도는 대부분 해당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행위제한 및 규제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민원해소, 주민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도시주변지역지원사업 역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우려에 대응하여 주민행위를 제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3-17〉 주민지원제도의 목적

구 분	목 적
행정도시주변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예정지역과 연접하여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및 민원해소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규제를 받는 주민에게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불이익을 보전하고 상수원 수질보전에 동참 유도
4대강 상수원관리지역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등의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주민불편 및 민원해소
백두대간 보호정책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백두대간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도모
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자연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발전소주변지역	환경오염 및 안전성 등의 문제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발전소 건설입지의 원활한 확보 도모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반대로 그 설치가 어려워 환경보전 및 국가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댐주변지역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
접경지역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주한미군시설사업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 촉진과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보호를 기하는 동시에,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야생동식물특별 보호구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지역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의 지원을 통해 주민불편을 덜고 자연생태계 보전

2) 성격

주민지원제도의 성격은 크게 계획보상과 간접보상(간접적 손실보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댐주변지역 등은 간접보상 성격이고, 나머지 지원제도는 계획보상 성격을 지닌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지원제도는 주변지역을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에 준하는 행위 제한에 대한 계획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표 3-18〉 주민지원제도의 성격

성 격	구 분
계획보상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4대강 상수원관리지역
	백두대간 보호정책
	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간접보상	발전소주변지역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댐주변지역

3) 지원주체

대부분의 주민지원제도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자와 지원사업 시행자가 동일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자가 건설청장인데 비해 사업시행자는 광역시장, 시장, 군수, 사업시행자 등으로 주체가 달라 사업추진의 지연 및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표 3-19〉 주민지원제도의 지원주체

구 분	지 원 주 체			
	사업계획지침 작성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	사업 시행
행복도시 주변지역	—	건설청장	건설청장	광역시장시장군수 ·사업시행자
개발제한구역	—	시장군수구청장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상수원보호구역	—	관리청	사도지사, 환경부장관	관리청
4대강 상수원관리지역	수계관리위원회	관리청	수계관리위원회	관리청
백두대간보호지역	—	사도지사	산림청장	시장군수
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	공원관리청	—	공원관리청
발전소주변지역	산업자원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발 전사업자	산업자원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발전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댐주변지역	—	댐관리청(건교부장관 또는 사도지사) 또는 댐수탁관리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	댐관리청·댐수탁관리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4) 지원대상

계획보상 성격의 지원사업은 해당구역내 주민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간접보상 성격의 지원사업은 사업에 따른 영향권내의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행정도시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주민들을 계획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아니라 지역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20〉 주민지원제도의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세 부 내 용
행복도시 주변지역	• 주변지역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주민	-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등	-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거주자 -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농림·수산업 종사자 - 구역 지정으로 보호구역 안에서 생업유지 곤란자
4대강 상수원관리지역	•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안의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의 거주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의 토지·건물소유자 - 농림수산업 종사자
백두대간보호지역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 보호지역 안의 거주자 - 보호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공원구역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 자연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거주하는 주민	-
발전소주변지역	• 발전소 주변지역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 수력발전소 주변지역	- 발전소의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 지역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 주변영향지역	- 직접영향권 - 간접영향권
댐주변지역	• 댐주변지역	- 댐건설전부터의 거주자로서 토지·건물소유자 - 댐의 계획홍수위선 이내 지역 -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km 이내 지역

5) 지원사업 내용

대부분의 지역지원제도의 지원사업내용은 소득증대·복지증진·생활편익증진과 관련된 것이며, 직접지원사업·육영사업·보조사업 등도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특별법에서는 생활편익사업·복지증진사업·소득증대사업 등 세 가지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타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21〉 주민지원제도의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구 분	세부사업내용
행복도시 주변지역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	기반시설·복지시설·생산유통시설의 설치 및 정비
개발제한구역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연구조사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	
4대강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직접지원사업	
백두대간 보호지역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환경보전시설설치사업, 소득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	
공원구역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생활환경개선사업, 복리증진사업, 기타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	
댐주변지역	지역지원사업(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 주민지원사업(주민생활지원, 육영), 기타지원사업(사용료보조, 기타부대사업)	

(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행정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생활편익사업·복지증진사업·소득증대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등이다.

〈표 3-22〉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사 업 종 류	세 부 지 원 방 법
생활편익사업	○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그 부대사업
복지증진사업	○ 주택개량,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정비 및 그 부대사업
소득증대사업	○ 주변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2)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은 생활편익사업·복지증진사업·연구조사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다.

〈표 3-2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사 업 구 분	사 업 세 부 내 용
생활편익사업	◦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련 부대사업
복지증진사업	◦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정비 및 관련 부대사업
연구조사사업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3)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육영사업·기타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농림수산물관련시설 지원, 영농방법 개선, 상하수도시설, 의료 및 문화시설, 육영시설, 오염물질정화비용, 이주 및 전입지원 등이다.

〈표 3-24〉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유형

사 업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소득증대사업	농기구수리시설·생산물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물관련시설의 지원과 기타 환경부장관이 수질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의료기구 및 구급차 지원과 주민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육 영 사 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지급, 장학기금적립, 학교급식시설지원 등 육영관련사업과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 타 사 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정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안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4) 4대강 상수원관리지역

4대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육영사업·오염물질정화사업·직접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농림축수산 시설 설치·운영, 환경농업지원, 주민편의시설, 의료·사회복지·문화시설 설치·운영,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장학금 지급 등이다.

〈표 3-25〉 4대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사업구분		세부사업내용
일반 지원사업	소득증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물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및 배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분·노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제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의 지원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복지증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도 시설, 중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주민의 건강진단, 진료소·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노인회관 마을회관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차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도서관 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그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육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부재 및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의 설치,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등 육영관련사업과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내수면양식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사업 그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직접 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열이용시설 취사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 조림·육림 등 수원함양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중 산주부담분 그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5) 백두대간 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시설설치사업·백두대간호보사업·소득지원사업·기타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농림축산업·수도·환경보전 및 이용 시설 설치, 소득감소분 지원, 오폐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생태교육·체험시설 등이다.

〈표 3-26〉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유형

사 업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역
소득증대사업	○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시설설치사업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백두대간보호사업	○ 백두대간의 복원·복구사업 ○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지원
소득지원사업	○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 -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별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기타 지원사업	○ 친환경에너지 재생 및 활용시설 ○ 오수 처리시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 마을회관 및 가로등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 백두대간 생태교육·체험 등을 위한 시설

(6) 자연공원구역

자연공원구역 지원사업은 생활환경개선사업·복리증진사업·기타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교통·편익시설 설치 등이다.

〈표 3-27〉 자연공원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유형

사 업 구 분	세 부 내 용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복리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기타사업	○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과 발전사업자지원사업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기본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육영사업·사회복지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각종 시설설치·운영, 교육지원, 프로그램운영, 자금지원, 전기요금보조 등이다. 반면, 발전사업자지원사업은 교육장학지원사업·지역경제협력사업·주변환경개선사업·지역복지사업·지역문화진흥사업·기타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인재양성, 특산물판매, 생활환경 및 여건 개선, 문화환경 조성 등이다.

〈표 3-28〉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의 종류

사 업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공공시설사업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 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
육 영 사 업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	복지회관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시설 확충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의 유치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 지역의 수익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전력 및 산업용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주 :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는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조사·연구 및 경비지원 포함

〈표 3-29〉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의 종류

사 업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교육·장학지원사업	지역우수인재 육성, 기숙사 마련, 영어미을 연수, 우수교사 유치 및 장학사업 등 교육관련 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지역특산물 판로지원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바다정화, 도로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사업
지역복지사업	복지시설 지원, 육아시설 건립·운영, 체육시설 마련 및 마을버스 운영지원 등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문화행사 지원 및 문화시설 건립 지원 등 지역주민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기타 지원사업	지역홍보 등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복지증진,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및 운영과 관련한 부대사업

(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육영사업·사회복지사업·기타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각종 산업 및 기반시설 설치, 의료·복지·교육·문화시설 설치, 장학금지원 등이다.

〈표 3-3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구분	사업 내용	세 부 사 업 내 용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영어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저수지·농로·임도·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농작물 및 임산물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수도·직업훈련소·시장·공용창고·구판장·소규모공단 등
	관광산업시설	휴게소·휴양소·토산품판매장 등
복지증진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마을회관·공중목욕탕·가로등·어린이놀이터·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도로 등
	항만시설	소형선박용항만시설·소규모어항·호안옹벽·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교육·문화시설	도서관·유치원·통학차·문화시설·향토박물관·사적시설·사회교육시설 등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배수구시설·청소차공중위생시설·환경감시시설 등
	운동·오락시설	운동장·야영장·운동기구 등
	전기·통신시설	공용전기시설 및 전화시설·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기 타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지원(소각시설에 한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육영사업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학자금 및 장학금지급·장학기금적립·학교급식지원 등	
기 타	기타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댐주변지역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역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기타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소득증대·생활기반사업, 주민생활지원·육영사업, 댐저수로 사용료 보조사업·홍보 및 부대사업 등이다.

〈표 3-31〉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사 업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지역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영농시설·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시설·농로·농업용수로 및 농업용양수장 등 농림수산업 관련사업 톱밥 등 수분조절재의 공동구입 및 공동퇴비화시설 등축산업 관련사업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 관련사업 그 밖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구 및 구급차량구입지원 등 의료환경조성사업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통학차·버스승차대기장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 그 밖에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건강진단, 의료보험지원, 고립주민 교통비지원, 난방비지원, 통신비지원, 전기료 보조, 홍수조절지 친환경영농지원 등 주민 생활지원사업 그 밖에 댐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육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자재·도서의 구입,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학교급식시설지원 및 아동급식지원 등 육영관련 사업 그 밖에 댐주변지역의 육영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타지원사업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구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고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납부하는 댐저수사용료를 보조하는 사업
	홍보 및 부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행사지원, 댐환경보전 연구지원, 농기구 수리, 댐주변 고립지역 도선운영지원, 자매부락지원 등 대민지원, 대청결운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 지역홍보, 주민간담회, 댐견학 등 홍보사업 및 지원사업협의회 운영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 : 각 사업의 내용에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한 조사, 계획, 연구, 시설의 유지·보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주민의견 수렴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첫째, 계획수립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법령에 규정된 경우와 둘째, 계획수립시 주민지원협의회나 지원사업협의회에 참여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계획을 수립하지만, 계획수립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표 3-32〉 각종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의견 수렴방법 비교

구 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 민
행복도시 주변지역	계획수립	협 의	-
개발제한구역	-	계획수립	-
상수원보호구역	-	계획수립	의견수렴 사업추진위원회 마을주민회의·읍면주민회의
4대강 상수원관리지역	-	계획수립	의견수렴(수렴방법은 미규정)
백두대간보호지역	-	계획수립	-
공원구역 자연환경·자연마을지구	-	계획수립	의견수렴(수렴방법은 미규정)
발전소주변지역	-	계획수립	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참여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	계획수립	주민지원협의회 참여
댐주변지역	계획수립	협 의	지원사업협의회 참여

7) 지원기준

대부분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의 유형 및 우선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해 사업비 지원기준, 총사업비를 지원대상별로 배분하는 사업비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표 3-33〉 각종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비교

구 분	지 원 기 준	세 부 내 용
행복도시 주변지역	-	-
개발제한구역	-	-
상수원보호구역	○ 사업별 지원기준	- 타법에 의한 지원가능사업의 배제 - 사업시행 후 관리방안 고려 - 주민공동사업 우선 - 시설물 장기 영구임대방식 등
	○ 사업비 배분기준	- 인구·면적
4대강 상수원관리지역	○ 사업별 지원기준	- 상수원보호구역 :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 수변구역 :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 특별대책지역 : 일반지원사업
	○ 사업비 배분기준	- 인구·면적
백두대간보호지역	-	-
공원구역 자연환경·자연마을지구	○ 사업비 배분기준	- 거주기간 차등 지원
발전소주변지역	○ 사업비 배분기준	- 면적·인구·발전정도·지역여건 고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 사업별 배분기준	- 직접영향권 : 가구별지원 - 간접영향권 : 공동사업 지원
댐주변지역	○ 사업비 배분기준	- 수물지역 면적(30%) - 인구(30%) - 면적(20%) - 지원사업협의회와 협의(20%)

그러나 행정중심도시 지원사업은 사업별 지원기준이나 사업비 배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8) 재원조달

백두대간보호지역, 공원구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변지역 지원제도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 등 별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행정도시 주변지역지원사업도 필요한 재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다.

〈표 3-34〉 주민지원제도의 재원조달

구 분	특 별 회 계	기 타 재 원	비 고
행복도시 주변지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이전청사 및 부지 매각대금 등, 타회계·공 공자금관리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 금, 수입금 등	-	
개발제한구역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70% 이내)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국민주택기금(우선 지원)	취락지구안 주택
상수원보호구역	○ 별도회계 관리 -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수익금, 차입금, 타회 계 전입금 등(환경개선특별회계 30% 이내)	-	
4대강 상수원관리지역	○ 수질개선특별회계(시도, 시군구) - 국가·시도보조금, 지방양여금, 타회계·수 계관리기금 전입금, 차입금 등	수계관리기금 (물이용부담금)	
백두대간보호지역	○ 미확보	-	미실시
공원구역	○ 미확보	-	미실시
자연환경·자연마을지구	○ 미확보	-	미실시
발전소주변지역	○ 별도회계 관리(전력산업기반기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 별도회계 관리(주민지원기금)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출연금, 폐기물반 입 수수료, 가산금, 기금운용 수익금, 타 지 자체 반입 출연금 등	-	지자체별로 사 업자금을 조성 하여 시행
댐주변지역	○ 별도회계 관리 - 댐관리청·댐사용권자·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차입금, 수익금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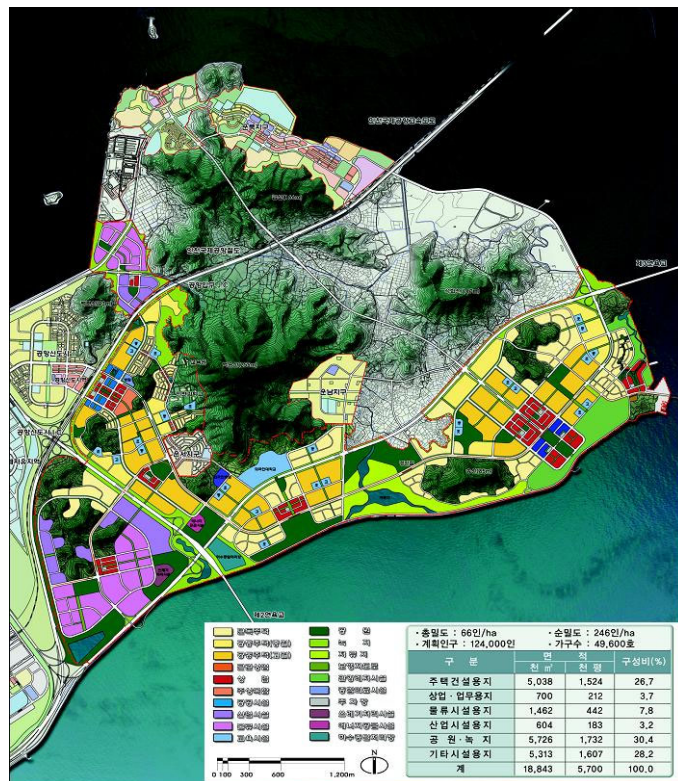
5. 국내외 사례분석

1) 국내사례

(1) 주변지역 관리

주변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한 것은 영종지구개발사업이 최초의 사례이다.

건설교통부는 2002년 10월 15일(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시 중구 중산·운남·운서동 일대(영종도) 11.48km²(약 347만평)를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림 3-2] 영종지구 개발구상도

중도위가 지정한 영종도 일대 시가화조정구역은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인천국제공항 2단계 개발과 연계해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화 유보기간은 15년이다.

인천시는 이 지역을 국제업무와 첨단산업, 물류·유통, 관광·위락, 주거 등 복합기능을 갖춘 배후단지로 개발하되 20만~30만평 규모의 계획적 개발만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종도 일대 시가화조정구역은 개발을 전제로 한 시가화조정구역이라는 측면에서 행정도시 주변지역 시가화조정구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영종도는 향후 도시개발 예정지역을 유보한 경우이고, 주변지역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을 한다는데 차이가 있다. 또한, 영종도의 경우 개발예정지로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계획되어 있는 반면, 주변지역의 경우 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해 행위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다면 영종도는 토지수용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주변지역은 지원사업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생활불편에 다른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주민지원제도

① 무주양수발전처 주변지역지원사업

한국남동발전 무주양수발전처에서는 발전처로부터 반경 5km 이내 지역인 무주군 적상면, 무주읍, 설천면 일원을 대상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법령에 제시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육영사업, 홍보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한 금액은 약89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장학금지급은 지금까지 중학생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584명에서 2억6천만원을 지급하였다.

②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2000년 현재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 중

45.9%가 복지증진사업, 24%가 오염물질 정화사업, 17.5%가 소득증대사업, 11.9%가 직접지원사업, 0.7%가 육영사업으로 지원되었다. 남양주시 등 1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상수원관리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의 50% 범위 이내로 직접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수도권매립지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1992년부터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금까지 생활환경개선, 주민수혜사업, 상수도 설치, 도로건설, 복지회관건립, 정수기 구입지원, 학교교육환경개선, 극심피해지역 이주, 취락지역지정 용역, 마을버스구입지원, 노인정 설치 등의 사업에 제1매립장(1992-2000)에서 1,600억원, 제2매립장(2001-2005)에서 580억원을 지원하였다.

2002년부터 상수도지원, 학교지원 등 지역별 시급한 사업에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편성한 전체공동사업도 2002년 5억, 2003년 1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지원사업은 장학재단지원, 노인회지원, 학교지원, 주민건강진단 등이다.

2) 국외사례

(1) 일본

일본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974년 제정된 「전원3법(전원개발촉진세법,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법, 발전용시설주변지역정비법)」에 입각하여 교부금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2001년 제정된 「원자력발전시설등입지지역의진흥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개별전력회사에서 「전원3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와는 별도로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이나 시설투자하는 식으로도 사업이 추진된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공공시설이나 산업진흥시설 정비, 선진지 견학, 강연회 개최, 홍보물 제작, 이벤트 개최,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의료, 사회복지, 교육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설치와 운영, 상공업, 농림수산업, 관광업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항만, 공원, 수도, 통신시설, 환경위생시설, 의료시설 정비, 가정 복지사업, 인재육성, 산업단지조성 등 공사비 등을 들 수 있다.

개별전력회사에서도 발전소 폐열 및 부지활용사업, 양식장 온배수 공급하여 어류양식지원, 발전소내 타조사육, 허브원 설치, 발전소내 게이트볼대회, 펜싱대회, 영화상영 등의 이벤트를 개최한다.

한편, 오사카, 교토, 고베, 효고현 등의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파호 종합개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사례를 보면 재원은 상류지역 지자체의 상류부담금, 국가보조금, 하류지자체의 하류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조성된 관리기금은 하수도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 정비사업, 상수도 정비사업, 농업용배수시설 정비사업, 조립사업, 도시공원 또는 자연공원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시설정비사업, 수자원보호·배양·개발사업, 수산물유통·가공시설 정비사업, 어항정비사업, 축산환경정비사업, 농업집락 배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쓰레기처리시설 정비사업 등으로 활용한다.

(2) 타이완

타이완에서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으로 하고,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역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지원금의 배분, 환경생태조사·연구 및 분쟁해결, 전력개발, 송전 및 변전시설의 교류, 홍보 및 공무 촉진, 공공건설 및 공익활동, 산업발전, 환경생태보호 및 육성활동, 문화교육 및 사회복지 활동, 장학기금 설립 등을 위한 지원된다.

(3) 미국

미국은 9개주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규약을 두고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없으나,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실시하고 있다.

지원기금은 사업자금융자, 소액융자, 정화조설치 보조, 고용창출 등을 위한 Catskill 미래 기금, 경제발전연구, 신규건축물에 대한 강우관리, 정화조보수 및 교체, 개량형 정화조 비용 보조, 환경친화적인 제설제 보급, 환경육영사업 등을 지원한다.

3) 국내외 사례분석의 시사점

주변지역 관리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영종지구개발사업에 서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은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일정기반 유효하기 위한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정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수준의 행위제한은 명백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단지 행정기관 지침으로만 제시되어 논리적 설득력이 미흡하다.

주변지역의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등의 용도지역은 이미 개별법으로 인한 행위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한 적법한 행위마저도 또 다른 지침에 의해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민원제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종도 일대 시가화조정구역은 해당지역의 개발을 전제로 하여 지정한 반면, 행정도시 주변지역은 주변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개발을 대신하여 행위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도 불만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발전소 등의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대부분 공공시설이나 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행정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큰 차이가 없지만, 시설뿐 아니라 주민건강 진단,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사업내용도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사업내용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도 우리 나라와 비슷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행정도시 주변지역도 지역주민들 중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산물을 제값받고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4장 주변지역 관리·지원내용 분석

1. 주변지역 관리방안의 내용분석

1) 관리방안의 내용

(1) 기본방향

국토연구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주변지역 관리방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주변지역은 행정도시가 성숙될 때까지 보전을 기조로 관리
 - 존치구역은 행위제한을 강화하거나 개발행위 승인기준을 엄격히 적용
 - 기타지역은 최대한 개발행위를 억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까지 시가화조정구역수준 유지
-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한된 지역에 계획 개발만 허용
 - 지역유형구분을 통해 개발 및 보전을 위한 토지구분
 - 집단취락 등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예정지역 미래상과 조화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
- 단기적으로 존치구역과 비존치구역을 구분하여 건설청장 고시 마련
 - 존치구역은 기존 도시계획조례보다 강화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
 - 비존치구역은 집단취락지역을 지정하고, 이 중 일부지역에 대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 개발유도
- 중·장기적으로 비존치구역은 지역유형 구분결과와 기존 용도지역을 비교하여 도시관리

계획 수립시 적절한 용도지역 변경 권고

(2) 건설청장 고시(안)⁶⁾

① 기본방향

- 도시확산 방지, 우수한 경관 보전, 도시기반시설 부담 최소화를 위해 행위제한 강화
 - 존치구역 및 새로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예정지역 미래상과 조화된 개발허용
 -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이나 농경지에 대한 개발 제한
 - 기반시설 용량 내에서 계획적 개발허용

② 행위제한 강화방법

- 용도규제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수립기준
- 개발행위 허가기준
- 용도지구 지정 및 행위규제
- 용적률·건폐율 규제

③ 용도규제 기본원칙

- 단독주택 : 농가주택 중심으로 허용
- 공동주택 : 아파트를 제외하고 존치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허용
- 근린생활 : 필수적인 시설만 단일건물에 허용
- 문화·집회·판매·영업·의료·업무 : 기존시설을 이용하고 주변지역에는 불허
- 교육·연구·복지 : 초·중·고등학교 및 복지시설 허용
- 관광휴게운동 :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허용

6) 국토연구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연구협의회, 2006.9.8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2007년에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될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장 :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에 허용
- 동식물관련 창고 : 1차산업 관련 시설만 허용, 축사는 집단화 유도
- 숙박·위락·위험물저장처리, 분뇨·쓰레기처리 : 난개발가능성이 크므로 불허
- 자동차관련 : 개발이 허용된 지역에 허용
- 공공용 : 행정도시와 관련된 시설 중 일부를 입지여건 감안하여 허용
- 묘지관련 : 집단묘지지구에만 허용

④ 건축물 밀도규제

- 건축물 밀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하한으로 설정
 - 건설청장 고시에 밀도를 하한으로 규정해도 현재의 개발정도를 감안하면 실효성이 적음

⑤ 종합

- 존치구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 용도·밀도 규제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강화
 - 자연·집단취락지구 : 용도·밀도규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강화
- 비존치구역
 - 계획적 개발유도지역 :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강화
 - 현상유지지역 : 자연취락지구로 간주하여 관리
 - 보존지역 : 시가화조정구역 수준 강화, 경관지구, 보존지구 등 지정

2) 관리방안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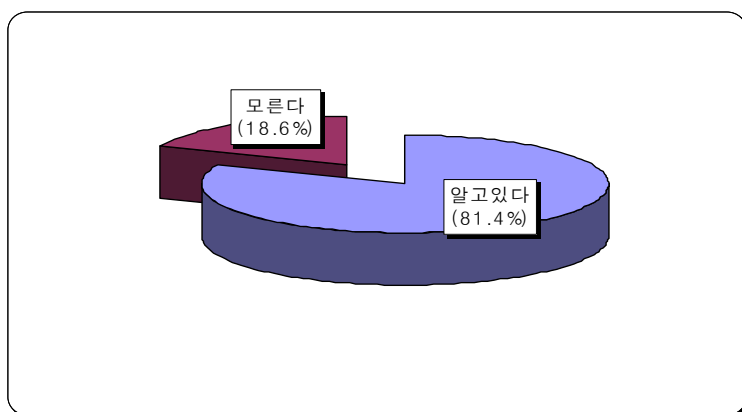
(1) 시가화조정구역 제도에 대한 제한된 정보

특별법에 제시된 시가화조정구역은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계획적, 단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일정기간 시가화 유보가 필요할 때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제도는 도입된지 20여년이 흘렀지만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 2002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시 폐지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기도 했지만, 2002년 인천영종도 국제공항개발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최초로 시가화조정구역이 지정되기도 하였다.

행정도시 주변지역 주민들은 1971년 도입되어 실제 주변지역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실제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이지만,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 어떠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에서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경우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지역내 주민들의 피해보상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을 명문화하였고 기타 대도시 주변이나 신도시를 건설하여도 70년대 초 개발제한 구역지정 후 국민들의 대단한 불만으로 추가 지정한 사례나, 엄격한 행위 제한으로 피해보상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행복도시 주변지역 주민은 개발제한구역보다 강화된 시가화조정구역 행위제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 적용에 대한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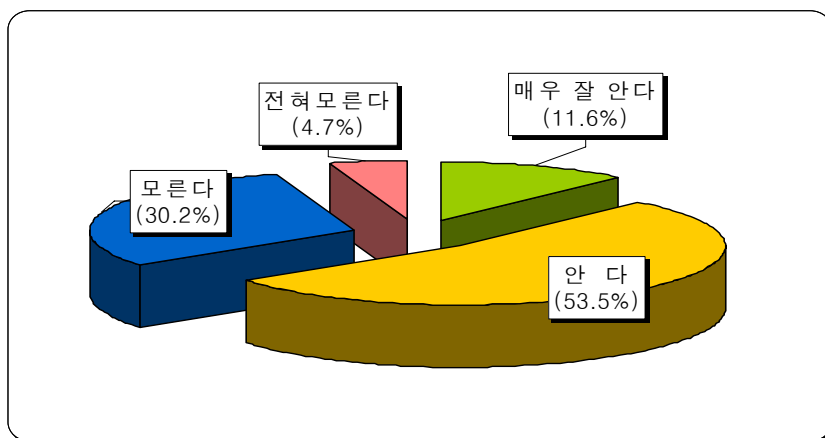
더욱이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주변지역 관리방향 및 건설청장고시(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대책 및 주변지역관리방안(행정중심복합도시공청회 참고자료 : 2005. 4. 8)’에서 제시되었던, 주변지역관리방안보다 전반적으로 행위제한이 강화된 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청회때 제시되었던 기준보다 강화된 행위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지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이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청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 인지도여부를 조사한 결과 81.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18.6%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주변지역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을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시가화조정구역 제도의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부족

현재 건설청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가화 조정구역수준으로 엄격한 행위제한 계획으로 주변지역 관리지침 완료(05. 6. 2)후 세부적인 주변지역 관리방안을 국책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어 용역이 완료되면 주변지역은 현재의 상태보다 세분하여 엄격하게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그러나 행위제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림 4-2]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 내용에 대한 인지여부

충청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안다는 응답이 65.1%. 모른다는 응답이 34.9%로 전문가들의 약 35%는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행위제한 내용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주변지역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으로 관리된다는 사실은 인지하지만, 행위제한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에 대해서 모르는 전문가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보면, 주변지역에서 거주하는 일반주민들이 행위제한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시가화조정구역 수준 행위제한의 부당성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의거 지정되지만, 주변지역의 경우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향후 도시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도 아니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을 가하는 것은 주변지역내 주민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시개발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합리함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자치단체나 주변지역 주민 등이 그 행위제한의 부당성을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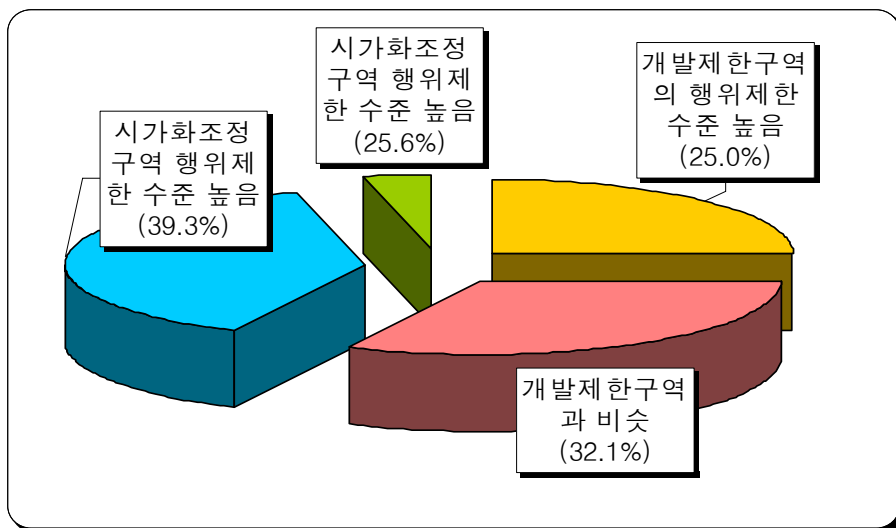
(4) 개발제한구역보다 강도 높은 행위제한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수준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설치 등에서 개발제한구역보다 높고, 공장, 공익시설, 종교·문화시설, 농·수산업용시설 등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수준과 비슷하다.

이와 같이 개별법에 의해 제한을 받아오던 주변지역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을 받음에 따라서 주변지역내 주택 신축이 불가능하여 보상을 받은 예정지역 주민들이 주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고 이에 따라 예정지역 주민들은 주변도시나 주변

지역내 도시지역 등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다. 즉,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오히려 주변지역 일부지역의 난개발을 유도하는 반면, 나머지는 활력이 상실된 지역사회로 만들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다.

충청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수준이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39.3%, 비슷하다는 응답이 32.1%로 적어도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하거나 높다는 응답률은 71.4%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수준이 개발제한구역수준 이상의 강한 행위제한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 시가화조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비교

따라서, 도시지역(42,493천m²)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다소 불만은 없는 편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30여 년 동안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편한 생활을 영위해왔는데 다시 현재보다도 더 강화된 행위제한이 가해지면 지자체에서 지역의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남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건폐율 40%를 허용하여 관리해 왔으나, 다시 20%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주민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며, 인근 대전광역시 및 청주시 그린벨트 해제지역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5) 과도한 용적률 제한을 통한 건축물 밀도규제

건축물 밀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용도지역별로 상하한선이 규정되어 있다. 건설청장 고시에 밀도를 하한으로 규정해도 현재의 개발정도를 감안하면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폐율의 경우 시행령에 제시된 밀도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지만, 용적률의 경우 상하한선 중 하한선 이하를 고시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용적률이 50~80%, 50~100%이면 50%, 100~200%이며 100%, 150~250%이면 250% 등으로 최소화하고 있고, 일반상업지구의 경우 300~1,300%를 300%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리지역(105,990천m²)중 생산, 보전관리 지역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나, 비교적 타지역 용도지역보다 허용행위가 많은 계획관리지역은 주민의 상당한 민원이 예상된다.

주변지역내 관리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는 별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용적률을 현행 80%에서 50%정도로 강화하고,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을 현행 100%에서 80%정도로 강화하는 것은 과도한 용적률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현재의 행위제한 내용만으로도 행정도시 예정지역 건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에도 불구하고, 현행 80%수준의 용적률을 50%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과도한 용적률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6) 존치구역에 대한 과도한 행위제한 강화

주거·상업·공업지역, 집단취락지역, 산업단지, 보존용도 등 존치구역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행위제한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층수규제, 제1종 지구단위개발구역은 금남면 도시계획구역보다 낮은 개발밀도, 자연취락지구는 일상생활에 필수적 시설만 허용, 집단취락지구는 건폐율 및 용적률 하향조정,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밀도·층수규제, 보존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용적률과 건폐율 하향조정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존치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허용행위보다 대부분 강화된 행위제한을 계획함에 따른 불만이 고조될 수 있어, 개별법과 해당 시·군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수준으로 행위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4-1〉 주변지역 관리의 문제점

문 제 점	주 요 내 용
시가화조정구역 제도에 대한 제한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화조정구역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 인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함 • 한차례 공청회에서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에 대해 설명한 바 있으나, 주변지역주민들이 이해하는데는 절대적인 정보의 부족
시가화조정구역 제도의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수의 교수, 연구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 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주변지역 주민들도 주변지역에 대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 제한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정도가 부족함
시가화조정구역 수준 행위제한의 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개발 예정지역을 계획적, 단계적으로 개발 하기 위한 제도 • 주변지역은 농촌지역이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은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차원에서도 불합리
개발제한구역보다 강도 높은 행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은 주택, 근린생활, 주민공동시설 이용 등에서 제한구역보다 높은 강도 •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강화는 예정지역 주민의 정주를 제한함으로써 주변지역을 활력이 상실된 지역으로 조장하는 결과는 낳을 수 있음
과도한 용적률 제한을 통한 건축물 밀도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적률을 시행령 및 시군조례에서 정한 하한선으로 과도하게 제한 하고 있음 • 특히,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용적률의 과도한 적용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
존치구역에 대한 과도한 행위제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상업·공업지역, 집단취락지역, 산업단지, 보존용도 등 존치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강화 • 현재 허용행위보다 대부분 강화된 행위제한을 계획함에 따른 불만 고조

2. 주변지역 지원방안의 내용분석

1) 주변지역 지원방안의 내용

(1) 대상지역 선정기준(안)⁷⁾

① 계획적 개발 허용지역의 제외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은 주변지역 가운데 엄격한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됨으로써 주민생활 및 생산활동에 상당한 정도로 불편을 받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지나친 불이익을 받는데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띠므로 실제 주민생활 및 생산활동 수준이 종전보다 현저히 저하된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논리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표 4-2〉 계획수립 대상지역 해당 여부

지 역		구 분	판 단 근 거		대상지역 해당여부
			건물 집단화	향후 관리방향	
존치 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계획적 개발을 유도	제 외
	자연취락지구	20 ~ 49호		최소한의 주민필수시설만 허용	포 함
	집단취락지구	20호 미만		개발을 엄격히 제한	
집단취 락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50호 이상		계획적 개발을 유도	제 외
	비지구단위계획구역	20 ~ 49호		최소한의 주민필수시설만 허용	포 함
타 법령에 의한 지원사업지역			—	지원사업을 통해 불이익을 보전	제 외

따라서 앞에서 본 지역유형별 관리방향에 의해 계획적 개발이 허용될 예정인 존치구역(자연취락지구 및 집단취락지구는 제외함, 이하 같음), 집단취락 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집단취락지역'이라 함)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집단취락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

7) 국토연구원, 행정도시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혁신토론회, 2006.9.15자료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2007년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과는 다를 수 있음.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생활편의시설 및 농림업생산시설 등의 설치만 허용할 예정이므로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타 법령에 의한 지원사업이 이미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인 지역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사업의 수준을 조정하였다.

② 주민 비거주지역의 제외

주변지역 안에는 주변지역으로 편입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일부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 까닭에 일상생활 및 생산활동에 현저히 지장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상지역에서 제외하였다.

(2) 대상지역 선정

주변지역내 총 141개 마을중에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 마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마을을 계획수립 대상지역으로 한다.

대상지역은 총141개 마을중 21개 마을은 계획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120개 마을이 계획수립대상지역에 해당하나, 이 중 6개 마을을 주민이 비거주하는 마을에 해당하여 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지원사업계획 수립대상은 114개 마을(행정리)이다.

(3) 지원사업의 종류 및 범위

①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시설 설치사업

대상시설의 선정결과 마을에서 18개, 면에서 11개, 시·군에서 9개, 주변지역 전체에서 1개 시설이 선정되면, 중복되는 시설을 제외하면 총29개 시설이 선정된다. 기능별로 보면, 생활 관련시설이 21개, 생산관련시설이 8개이다<표 4-3>.

② 소득증대사업

가. 특화마을

- 친환경농업마을
- 농산물가공업 마을
- 농촌관광마을
- 농산물물류마을
- 위락서비스 마을

〈표 4-3〉 지역단위 대상시설의 선정결과

구 분	마을(행정리)	면	사·군	주변지역 전체
	생활관련시설 마을회관 노인회관 어린이놀이터 마을공동쉼터 공동주차장 건강관리실 문화오락시설 정보화시설 마을공부방 보건진료소 마을하수도	면복지회관 어린이놀이터 공원 보건지소 유치원 하수도 쓰레기처리장 오수처리장	시군복지회관 어린이놀이터 공원 보건소 하수도 쓰레기처리장 오수처리장	상수도
소계	11	8	7	1
	생산관련시설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공동집·출하장 공동건조장 농산물가공시설 농산물유통시설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수리센터 농산물가공시설 농산물유통시설	농산물가공시설 농산물유통시설	
소계	7	3	2	—
합계	18	11	9	1

자료 : 국토연구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중간심의자료, 2006.

(4) 주민의견 수렴절차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이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5) 사업비 지원·배분기준 부재

행정도시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별 지원기준이나 사업비 배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객관성을 상실한 기준으로 사업비가 배분될 가능성이 있다.

(6) 재원확보방안 결여

행정도시특별법에서는 행정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시된 항목으로 안정적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이전청사 및 부지 매각대금이 환수될 시점과 지원사업을 추진할 시점간의 시간인 간격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예정지역내 공공시설 부지매입 및 청사건축비 등의 항목으로 우선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사업비로 사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행 령

제25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당해 청사·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부대시설 및 그 부지의 매각 및 보전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지출에 관한 사항(500억원 이상의 지출에 한한다)
 - 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될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의 부지매입·건축 및 이전 등
 - 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설치
 - 다.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
4.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에 관한 사항(500억원 이상의 차입에 한한다)

(7) 마을유형 구분의 유용성 결여

각 마을이 가진 특성에 따라 일정한 특화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마을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지역 마을은 공통점은 대부분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농촌마을이다. 이와 같이 산업적 측면에서 주변지역마을은 동질적이라 할 수 있으며, 농지이용에 따라 논농사 중심지역, 밭농사 중심지역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마을을 유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마을단위 지표를 대표하는 자료생산 및 구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별 유용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유형에 부합하는 사업이 오히려 농촌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농촌가공마을은 마을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관리·운영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촌주민의 상당수가 65세 이상이고, 농산물 가공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농촌주민들에게 농산물가공공장을 지원사업으로 결정했을 경우 과연 주민들이 동의할 것이며, 그러한 가공공장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의 상당수가 문을 닫고 있고, 그나마 운영중인 가공공장도 가동률이 50%정도에 불과한 실정에서, 일개 마을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가공공장의 관리·운영은 또 다른 농가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표 4-4〉 주변지역 지원의 문제점

문 제 점	주 요 내 용
지원주체의 이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 건설청장 • 사업시행 : 시장, 군수 • 숙원사업 해결중심의 요구 제가능성 높음
개별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체를 지원대상 • 개별주민에 대한 직접지원 근거 불명확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근거한 지원사업 명시 •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제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과정에 지역주민 참여기회 제한
사업비 지원·배분기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지원기준이나 사업비 배분기준 부재
재원확보방안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충당하도록 규정
마을유형구분의 유용성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기능에 따른 특화마을 및 일반마을 유형구분의 유용성 결여

제5장 주변지역의 관리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1. 주변지역 관리 개선방안

1) 단기적 관리방안

(1) 시가화조정구역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주민의견 수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에서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이 때만 하더라도 시가화조정구역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진 주민들은 별로 없었다. 더욱이 시가화조정구역의 내용을 이해하는 주민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한 이해 및 정보가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해 불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가화조정구역이 어떠한 제도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고, 개별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등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상하건데, 주변지역 관리방안에 대해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된다면,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향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수립중인 주변지역 관리방안 계획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계획의 수립취지, 내용 및 방법 등을 설명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변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건설청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

명회를 개최하고, 건설청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민들의 집단행동이나 민원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과정에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만 주변지역관리 및 지원사업 계획이 정당성을 담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주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행위제한 완화

현행 주변지역에서 허용가능한 개발행위는 용도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관리지역, 농림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단독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 묘지관련시설 등이다.

그러나 시가화조정구역으로의 지정은 주택의 신축이 금지되고, 증축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린생활시설 또한 신·증축이 금지되고, 종교·문화시설의 신축이 금지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주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관련된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영농행위와 관련된 불편함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관련된 행위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다.

특히, 예정지역 주민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예정지역내에 공동주택이나 택지를 분양받게 되어 있으나, 건설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개별법 적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현재의 행위제한 내용만으로도 행정도시 예정지역건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80%수준의 용적률을 50%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과도한 용적률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도 난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따로 용적률을 제한하지 말고, 개별법에 규정된 용적률

은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지정취지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제안을 하고 있어, 개발이 보다 엄격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 받아왔지만, 최근 우선해제에 따라 계획적 개발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행위제한을 강화할 경우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존치구역의 경우 개별법에 더해 또 다른 행위제한이 가해진다면 이는 이중적 행위제한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안(2007-2011)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취락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10호 이상의 집단취락을 조속히 지정해 행위규제를 완화한다.

취락지구 지정 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의 정비계획도 마련된다. 또 농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토지형질변경, 최소한의 건축행위 등은 행위허가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경지정리사업, 발기반 조성사업, 농업용수시설의 확보를 위한 개발행위는 적극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제한구역 내에 등산로, 산책로, 휴양림, 수목원 등을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설치해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 등에 테니스장, 잔디축구장 등의 체육시설도 확보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도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했다"며 "시가회를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구역내 토지를 활용토록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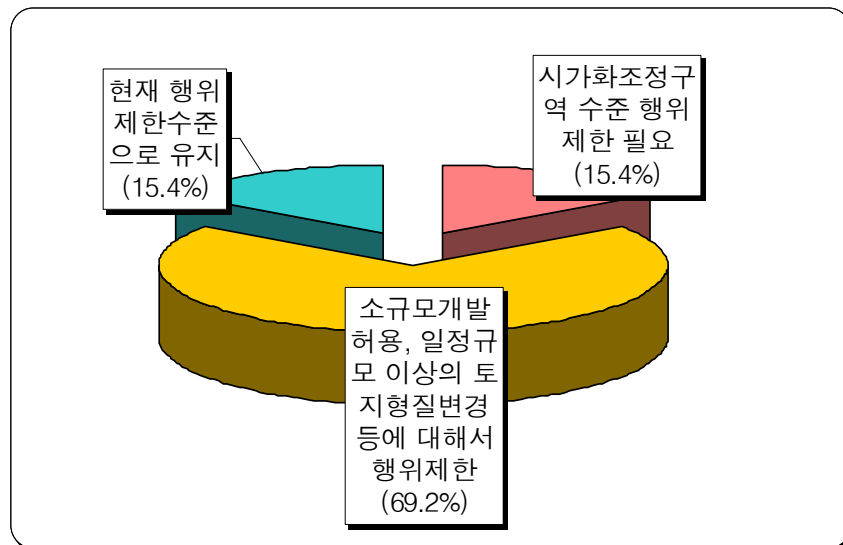
충청투데이(2006년)

(5) 대규모 개발행위를 중심으로 행위제한

현행 주변지역에서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시행령과 연기군·공주시·청원군 조례의 밀도가 일치하고 있고, 용적률도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시행령과 연기군·공주시·청원군 조례의 밀도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시행령과 3개 시군조례의 밀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시행령에서 정한 밀도를 적용해도 난개발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개발수요가 많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3개 시군의 조례를 검토하여 적정밀도를 정하되, 공동주택(아파트), 공장신축, 석산개발 등 대단위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충청권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되기 까지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방향으로 응답자 69.2%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해서만 행위제한을 하고 주민들의 소규모 개발행위는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현재의 행위제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위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15.4%로 행위제한이 필요없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전체의 84.6%에 달하고 있다.



[그림 5-1] 도시관리계획 수립까지 주변지역 행위제한 방향

2) 장기적 관리방안

(1)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에 대해 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지원사업보다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 자체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청에서는 향후 10년 이내에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현재의 행위제한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용도지역·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을 지정함으로써 주변지역을 보다 체계적인 개발 및 보전이 가능하겠지만, 시가화조정구역 또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오히려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의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주변지역의 행위제한이 완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정보보다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해 보다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주변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주민설명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지금은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불가피한 행위제한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편도 주변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불가피함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도시관리계획 조기수립

특별법에는 10년 이내라는 다소 장기간에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구 도시재정비) 수립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간 동안 엄격한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주민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주변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행위제한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들과의 갈등문제를 의식하고 주변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적 판단기준은 도시관계획의 상

위계획 단계에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됨을 감안하여 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광역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4항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표 5-1〉 주변지역 관리 개선방안

구분	개 선 방 안	주 요 내 용
단기 방안	시가화조정구역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주민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화조정구역 제도에 대한 주민설명 및 정보제공 • 주변지역 관리계획수립과정에 주변의견 수렴하여 반영 • 건설청안 확정이전에 주민설명회 개최 • 건설청안 확정된 후 주민공청회 개최
	주거 및 주민공동이용 시설 행위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규모 주택의 신축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지역 이주 주민에 한정 • 주택증축규모 확대(개별법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 • 일정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의 신증축 허용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한 개별 법 적용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적용된 용적률을 적용하여도 난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따로 용적률을 제한하지 말고, 개별법에 규정된 용적률을 적용(80%)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완화	•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관리
	대규모 개발행위를 중심으로 행위제한	• 개발수요가 많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3개 시군의 조례를 검토하여 적정밀도를 정하되, 공동주택(아파트), 공장신축, 석산개발 등 대단위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
장기 방안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	•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해 보다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주변지역주민들에게 제공
	도시관리계획 조기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법에서 10년 이내 수립 명기 • 광역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병행 수립필요

2. 주변지역 지원 개선방안

1) 단기적 지원방안

(1) 지원주체의 일원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4대강 상수원관리지역, 자연공원구역·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발전소주변지역,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댐주변지역 등은 모두 사업계획수립주체와 사업시행주체가 동일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청장과 시장·군수로 규정되어 있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주변지역도 예정지역과 마찬가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건설청장이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을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 지원사업계획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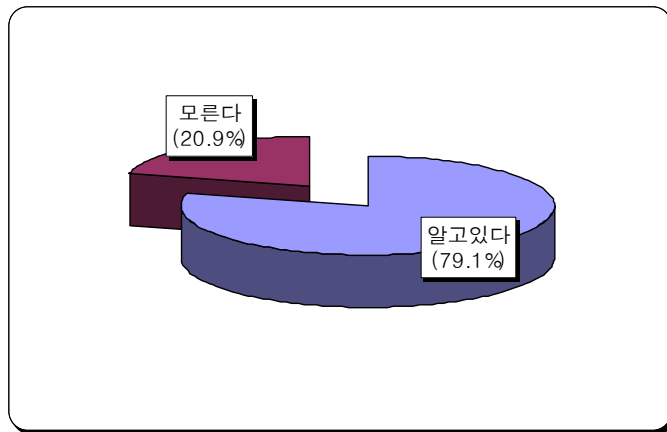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4대강 상수원관리지역, 자연공원구역·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발전소주변지역,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댐주변지역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주민 및 사업추진위원회, 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주민지원협의회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도시 주변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조사하고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계획수립과정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차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마을단위의 개발물량과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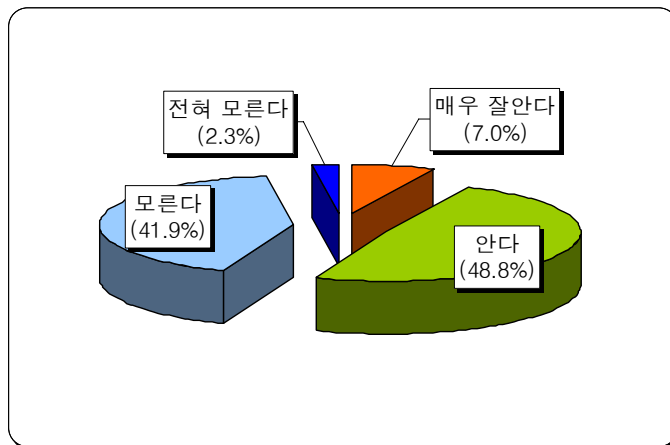
또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심의위원회나 지원사업협의회 등의 구성을 통해 계획수립과정에 전문가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청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79.1%가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44.2%가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변지역 지원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뿐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주변지역주민이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인지여부



[그림 5-3]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내용인지여부

(3) 지원사업 시행시기 명문화

주변지역의 소규모 지역숙원사업 및 증개축 행위 등에 대한 행위제한이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시작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명문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재원확보방안 제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확보와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여러 부처에서 시행중인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선별하여 지원사업에 편입하는 별도의 사업추진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 경우 주민들은 이를 지원사업이라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변지역 행위제한에 따른 보상차원의 지원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5) 지원사업의 공간단위 다양화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 단위를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지원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구별 지원은 지양하고 마을(행정리)을 지원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서는 마을단위 뿐 아니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공간단위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기반시설중 도로 등과 같은 선적인 사업과 규모화가 요구되는 사회복지 시설 등은 몇 개의 마을을 포함하는 공간단위가 필요할 것이고, 주택개량과 같은 점적인 사업은 개별가구가 공간단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공간단위를 마을단위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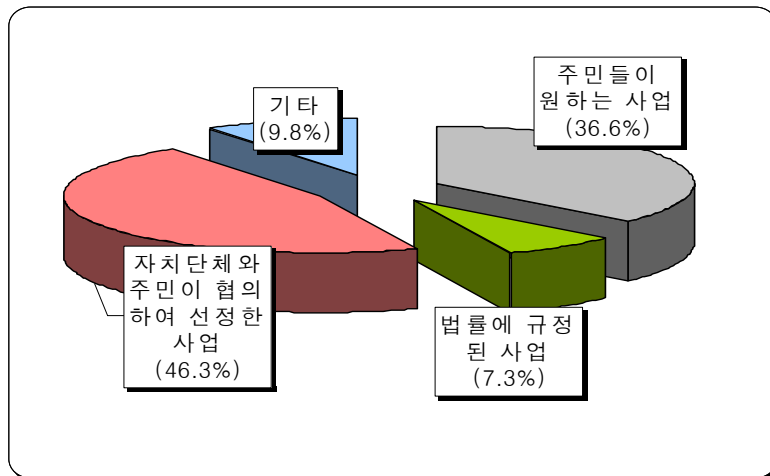
(6) 주변지역 전체를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주변지역내에서도 행위규제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주변지역 전체지역이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행위제한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되, 행위제한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변지역을 하나로 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선별적인 지원대상지역 선정은 주변지역내 지역간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7) 합리적 사업선정방식 도입

현재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선정은 주변지역 주민조사에 근거하여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주민이 협의하여 선정하는 것이다.



[그림 5-4]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선정방식

충청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46.3%가 자치단체와 주민의 협의하여 선정된 사업에 응답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36.6%에 달하고 있다. 반면, 법률에 규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7.3%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선정방식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와 주민의 협의과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지원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선정

특별법에 규정된 지원사업은 지원주체가 주민들을 위해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가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어떤 재정적 지원도 수반되지 않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창의력과 노력이 수반되는 사업 예들 들면, 농산물 가공공장 등의 사업은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일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된 주변지역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수반되지 않으면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시설의 노후화, 판매부진 등으로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다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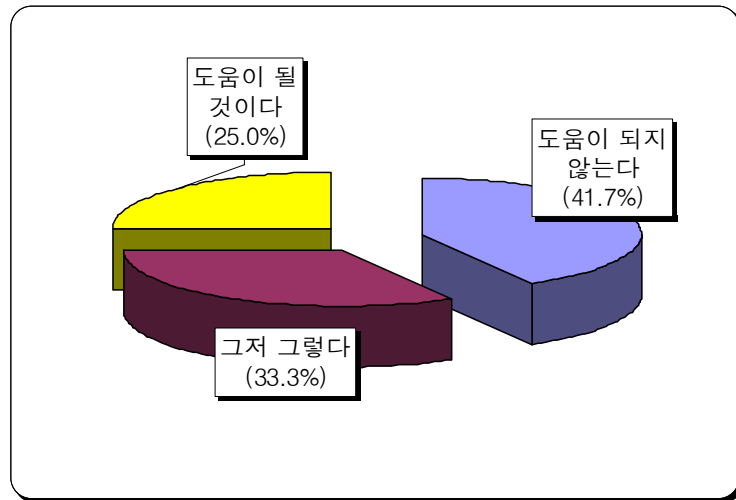
따라서,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법에 규정된 지원사업의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 지원사업 내용의 다양화

현재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사업과 기타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어 이를 보다 다양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예들 들면, 주변지역내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육영사업(지역우수인재 육성, 장학금 지급, 교육가자재지원, 교육관련 시설건립 등)과 지역경제협력사업(지역농특산물 구매 및 판로지원 등), 지역문화행사지원(문화행사지원, 문화시설 건립 등) 등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이 요구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충청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41.7%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5.0%에 불과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5]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질적 도움여부

따라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물적기반을 확충하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교육·문화에 대한 지원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판로확보를 통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을 함으로서 행위제한에 따른 보상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일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장기적 지원방안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대상 공간을 마을단위에서 탈피하여 몇 개의 마을을 포함하는 권역단위(면보다는 적은)로 추진하되,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한 재가복지시설을 설치 및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마을에 대한 농업기반시설보다는 생산한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를 대행해주는 등 새로운 지원방안 모색 등 사업영역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표 5-2〉 주변지역 지원 개선방안

구분	개 선 방 안	주 요 내 용
단기 방안	지원주체의 일원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군수가 사업을 시행하는 현행규정에서 탈피하여 건설청장이 계획수립과 시행을 함께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지원사업계획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보장	• 지원사업계획 수립과정에 주민의견의 수렴 및 반영을 위해 지원사업심의위원회 또는 지원사업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추진 -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공무원으로 구성 • 충청권전문가 조사결과 지원사업내용을 모르는 비율이 44.2%에 달해 주변지역주민이나 공무원에게 지원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정 필요
	지원사업 시행시기 명문화	•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로드맵을 명문화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재원확보방안 제시	•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원확보 방안 모색 • 전체지원금액 및 연간 지원금액 산출
	지원사업의 공간단위 다양화	• 주택개량과 같은 점적인 사업은 개별가구 • 도로 등과 같은 선적인 사업, 주민복지시설과 같이 규모화가 필요한 사업은 몇 개의 마을을 포함하는 공간단위가 필요
	주변지역 전체를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	• 주변지역 전체지역이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행위제한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되, 행위제한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리적 사업선정방식 도입	• 충청권전문가 조사결과 46.3%가 자치단체와 주민의 협의하여 선정에 응답 •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주민협의하에 선정
	지원사업이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성격	•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가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어떤 재정적 지원도 수반되지 않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장기 방안	지원사업내용의 다양화	• 주변지역내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육영사업(지역우수인재 육성, 장학금 지급, 교육기자재지원, 교육관련 시설건립 등)과 지역경제협력사업(지역농특산물 구매 및 판로지원 등), 지역문화행사지원(문화행사지원, 문화시설 건립 등) 등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 요구
	노인수발보험지원 및 농가생산물 판매 등 사업영역의 다양화	• 고령화되고 있는 주변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한 재가복지시설을 설치 및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농촌마을에 대한 농업기반시설보다는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를 대행해주는 등 새로운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수도권일극집중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개발계획도 공청회를 거쳐 최종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이며, 행정도시광역도시계획도 금년내 완료예정이다. 아울러 인구 20,000명과 주택 7,000호를 수용하는 첫 마을 사업이 2007년부터 첫 삽을 뜨게 되어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대부분 예정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주변지역은 예정지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관리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행정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에서 과도한 행위제한을 지양하여 거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주민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 차원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충청권의 전문가 100명(회수율 43%)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은 실태분석과 개선책 마련의 기초적 보완자료로 활용하였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및 주변지역의 물리적, 인문·사회적 여건분석을 통해 주변지역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주변지역 행위제한 및 주민지원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주변지역 내 132개 이장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시설의 설치여부(기설치, 설치중, 미설치), 마을의 생활여건 및 생산기반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여 주변지역의 특성분석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변지역 관리 및 지원제도를 검토하였다. 첫째, 주변지역관리제도는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전구역 등 「국토의이용및개발에관한법률」에 제시된 용도구역을 검토하되, 시가화조정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용도구역 분석을 통해 발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가화조정구역은 주택과 부속건물의 신축·증축 행위제한 강도가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비해 강하고, 근린생활시설의 신증축, 용도변경도 개발제한구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 강하다. 공장과 부대시설, 공익시설 신·증축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구역이나 지역과 비슷하거나 강도가 높다. 종교문화시설 신·증축은 보전산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 행위제한 강도가 강하다. 농수산업용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보전산지보다 행위제한 강도가 약할 뿐 대부분은 비슷하거나 강하다.

결국 시가화조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을 비교해 볼 때 공장, 공익시설, 종교문화시설, 농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수준은 비슷하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은 시가화조정구역이 강하게 나타나 주민의 거주 및 일상생활, 영농지원활동에 대한 주민불편이 개발제한구역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주변지역 지원제도는 16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있는 12개 주민지원제도를 목적, 성격, 지원주체, 지원대상, 지원사업내용, 주민의견수렴, 재원조달 등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지원제도는 지원목적, 성격, 지원대상, 지원사업 내용 등의 타제도와 유사한 반면, 사업계획수립자와 시행주체가 상이하고, 계획수립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사업비 배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른 지원제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주변지역 관리 및 지원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과 전국최초로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된 영종지구개발사업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일정기간 유보하기 위한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정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수준의 행위제한은 명백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단지 행정기관 지침으로만 제시되어 논리적 설득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발전소 등의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대부분 공공시설이나 사업을 그 내

용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행정도시 주변지역지원사업과 큰 차이가 없지만, 시설뿐 아니라 주민건강 진단,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사업내용도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내용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도 우리 나라와 비슷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행정도시 주변지역도 지역주민들 중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주변지역의 관리 및 지원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주변지역관리와 관련한 행정도시건설청장 고시(안)은 도시확산 방지, 우수한 경관 보전, 도시기반시설 부담 최소화를 위해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행위제한 강화방법으로 용도규제,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행위허가, 용도지구지정, 용적률·건폐율 규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지역관리방안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주변지역 주민이 행위제한을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주변지역 주민이 행위제한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행위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강화, 관리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강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취락지구에 대한 행위제한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지역 선정기준은 계획적 개발허용지역과 주민비거주지역을 제외함에 따라, 총141개 마을중 114개 행정리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시설 설치사업과 소득증대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되 소득증대사업은 특정부문에 특화된 마을 5개 유형(친환경농업마을, 농산물가공업마을, 농촌관광마을, 농산물물류마을, 위락서비스마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일반마을은 생산 및 생활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주변지역지원사업의 문제점은 지원주체, 지원대상, 지원사업 종류, 주민의견수렴, 사업비 지원기준, 재원확보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주변지역 관리방안과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변지역 관리방안으로 첫째, 시가화조정구역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주변지역 관리계획수립과정에 주민의견 수렴하여 반영하고, 건설청안 확정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건설청안 확정된 후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주택의 신축을 허용하고(예정지역 이주주민), 주택증축규모를 확대하며, 일정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의 신증축을 허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적용된 용적률을 적용하여도 난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따로 용적률을 제한하지 말고 개별법에 규정된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관리함으로써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발수요가 많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3개 시군의 조례를 검토하여 적정밀도를 정하되, 공동주택(아파트), 공장신축, 석산개발 등 대단위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해 보다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특별법에서 10년 이내 수립 명기된 도시관리계획의 조기수립이 요구된다.

한편, 주변지역 지원방안으로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군수가 사업을 시행하는 현행규정에서 탈피하여 건설청장이 계획수립과 시행을 함께 담당하는 지원주체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

둘째, 지원사업계획 수립과정에 주민의견의 수립 및 반영을 위해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원사업심의위원회 또는 지원사업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로드맵을 명문화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원확보 방안 모색 및 전체지원금액 및 연간 지원금액 산출이 요구된다.

다섯째, 주택개량과 같은 점적인 사업은 개별가구, 도로 등과 같은 선적인 사업, 주민복지시설과 같이 규모화가 필요한 사업은 몇 개의 마을을 포함하는 공간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주변지역 전체지역이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행위제한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되, 행위제한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충청권전문가 조사결과 46.3%가 지원사업은 자치단체와 주민의 협의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주민협의체에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가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홉째, 주변지역내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육영사업(지역우수인재 육성, 장학금 지급, 교육가자재지원, 교육관련 시설건립 등)과 지역경제협력사업(지역농특산물 구매 및 판로지원 등), 지역문화행사지원(문화행사지원, 문화시설 건립 등) 등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이 요구된다.

열째, 고령화되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한 재가복지시설을 설치 및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농촌마을에 대한 농업기반시설보다는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를 대행해주는 등 새로운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상의 기본방안 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요구해야 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이나 이에 따른 주민불편을 보상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나 해당 시군의 협력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따라서, 시가화조정구역제도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정보제공을 충실히 하며, 능동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목적과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주변지역 행위제한 강도의 완화이다. 예정지역 주민들이 이주해올 경우 일정규모 주택의 신축을 허용하고, 주택증축규모도 확대하며,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별법에서의 허용행위 적용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도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대단위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방안이다. 특화기능에 따른 마을유형구분을 통해 특화마을과 일반마을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지만, 오히려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되, 마을주민들의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사업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노인수발보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역별 지역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기구설립을 제안하였다.

2. 정책제언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 및 지원의 효율적 추진은 예정지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난개발을 이유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및 생산활동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어촌주택이 대부분 불량하지만, 주택신축이 금지되고 증축 또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변지역에서 대단위의 토지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행위만 제한하고 소규모의 개발은 허용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립중인 주변지역 관리 및 지원계획 과정에 충청남도과 주변지역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 주변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수립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주변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주변지역관리 및 지원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강화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건설청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는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이 연구에서는 주변지역 관리 및 지원방안의 문제점과 효율적 추진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자 수가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 주변지역과 관련된 집단이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편향성을 배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변지역 마을공동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설치여부, 만족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이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주변지역 관리방안을 이장에게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중앙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관리 방안 및 주민지원방안에 대해 충청남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2007년 완공예정인 「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관리방안」 최종보고서가 아니라, 중간보고서 수준의 내용을 참고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내용 중의 상당부분은 최종보고서에 담겨지는 내용과는 다르다는 한계도 있다.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보다 심층적인 실태조사와 객관적 분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대책 및 주변지역 관리 방안, 2005.
- 국토연구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중간심의자료, 2006.
- 국토연구원, 행정도시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혁신토론회, 2006.9.15.
-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신행정수도건설과 외국사례가 주는 교훈, 터키편 : 앙카라, 2003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단지계획」, 보성각, 1999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2005.7.
- 안형기, 조용진, 김덕준, 환경규제 정책과 규제순응: 주민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5.
- 윤영성, 팔당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지원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3.
- 이순배, 한국과 독일의 상수원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비교연구, 한독경상학회, 경상농촌, 2005.
- 이재준·권용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환경친화적인 취락지구 정비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제38권 2호, 2004.
- 최원희, 기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주변부 관리방안 및 주민이주대책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7권 2호, 200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 2006.

[부 록]

이장조사용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마을실태 및 주민희망사항 조사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실태분석 및 관리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주민 여러분이 바라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을 발전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조사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2

충남발전연구원장

이장명		휴대전화 번호		관할리	____시,군 ____리
-----	--	------------	--	-----	---------------

※ 관할리 명칭은 행정리로 기재해 주십시오. 예) ○○ 1리

1. 다음 시설 또는 서비스가 현재 리에 설치되어 있거나 제공되고 있는지 해당하는 난에
○표를 해 주십시오

시 설	설치·제공 여부			시 설	설치·제공 여부		
	기설치	설치중	미설치		기설치	설치중	미설치
리 사무소(주민센터)				약국			
마을쉼터 등 공원				보건지소			
상수도				도서관			
간이상수도				오락시설(노래방 등)			
하수도				학교급식시설			
마을하수도				학교버스			
오수처리시설				유아원·유치원			
쓰레기처리장				경지정리			
초고속인터넷망				수리시설			
마을버스				하천정비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경로당(노인회관)				공동건조장			
어린이놀이터				공동창고			
탁아소				공동저장고			
공동목욕탕				공동집하출하장			
생활체육시설				농기계보관소			
마을공동마당				정미소			
일용품 판매점				농산물 가공공장			

2. 이장님은 마을의 생활여건 및 생산기반 확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여건 및 생산기반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불필요
도로 · 마을안길 · 주차장 확충	①	②	③	④	⑤
마을공원 조성	①	②	③	④	⑤
상 · 하수도 확충	①	②	③	④	⑤
소하천 · 구거 및 배수시설 정비	①	②	③	④	⑤
오수 처리 및 쓰레기 처리장	①	②	③	④	⑤
텔레비전 수신 및 인터넷망확충	①	②	③	④	⑤
마을버스 · 정류장 등 교통시설	①	②	③	④	⑤
주택개량 확대	①	②	③	④	⑤
마을회관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①	②	③	④	⑤
병원 · 보건지소 등 의료시설	①	②	③	④	⑤
문화 · 오락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교육기자재 · 학교급식시설확충	①	②	③	④	⑤
통학버스 운행 확충	①	②	③	④	⑤
경지정리 · 수리시설 · 하천정비	①	②	③	④	⑤
공동작업장 · 공동건조장	①	②	③	④	⑤
농 · 임산물창고, 농기계보관창고	①	②	③	④	⑤
농로 · 임도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농 · 임산물 가공시설 설치	①	②	③	④	⑤
영농정보 · 기술의 제공·교육	①	②	③	④	⑤
농촌관광사업 지원	①	②	③	④	⑤
농촌부업 등 농외소득기회 증대	①	②	③	④	⑤
건강관리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마을지도자 육성	①	②	③	④	⑤
젊은 농민의 귀농	①	②	③	④	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주변지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연기·공주지역에 건설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정지역은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른 시가지조성을 위한 지역이고, 주변지역은 예정지역과 연결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주변지역관리방안(2005.4)에 따르면 예정지역 인근 주변지역은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시가지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되 10년 이내에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주민의 재산권침해라는 주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변지역의 관리방안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코자 합니다.

응답결과는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6. 10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연구부 송 두 범
(연락처 dbsong@cdi.re.kr, 042-820-1150)

□ 주변지역 관리방안

1. 주변지역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2. 시가화조정구역에 포함된 행위제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안다 ② 잘 안다 ③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3. (위문항 ①, ②에 답하신 분만) 개발제한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 행위제한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이 높다.
②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하다.
③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이 높다.
④ 시설유형에 따라 다르다.

4.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높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
②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해서만 행위제한을 하고, 주민들의 소규모 개발행위는 허용하여야 한다.
③ 현재의 행위제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위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다.
④ 기타 ()

☐ 주변지역 사업

5. 주변지역 행위제한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6.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안다 ② 잘 안다 ③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도움이 될 것이다 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① 주변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②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③ 충남도, 해당 시·군·면, 지역주민들의 협의 하에 선정된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 ④ 기타()

① 교수 ② 연구원 ③ 공무원

마을실태 및 주민희망사항 조사 결과

1. 시군/면별 시설·서비스의 설치·제공 여부

구 분	리사무소			마을쉼터			상수도			간이상수도			하수도			마을하수도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전 체	55	3	70	26	6	99	48	5	78	63	7	54	35	13	84	40	14	75
연기군	31	3	37	9	3	59	25	3	43	35	3	30	18	9	45	20	9	41
금남면	17	1	17	7	1	26	13	2	19	12	1	20	6	3	26	6	3	25
남면	3		2	1		4	1		4	2	1	2	1	2	2	3		2
동면	6	2	11	1	2	17	10	1	9	14	1	3	8	2	10	8	4	7
서면	5		7			12	1		11	7		5	3	2	7	3	2	7
공주시	14	0	12	13	0	13	7	2	17	11	1	14	4	2	20	9	1	16
반포면	2		4	3		3	3		3	4		2			6			6
장기면	5		8	4		9	3	2	8	4	1	8	3	2	8	3	1	9
의당면	7			6		1	1		6	3		4	1		6	6		1
청원군	10	0	21	4	3	27	16	0	18	17	3	10	13	2	19	11	4	18
부용면	8		18	3	3	23	16		13	14	2	9	13	1	15	10	2	16
강내면	2		3	1		4			5	3	1	1		1	4	1	2	2

구 분	오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장			초고속 인터넷망			마을버스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회관)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전 체	12	10	109	2	2	125	40	11	80	35	4	87	98	7	25	106	7	18
연기군	8	4	59	2	2	67	21	4	46	24	3	41	57	4	9	58	3	10
금남면	3		31	1		33	10	1	23	11	3	18	28	1	4	29	1	4
남면	1		4			5	2		3	3		2	5			5		
동면	3	3	14	1	2	17	7	2	11	6		13	16	3	1	13	2	5
서면	1	1	10			12	2	1	9	4		8	8		4	11		1
공주시	0	0	26	0	0	26	10	2	14	5	0	21	22	1	3	25	1	0
반포면			6			6	4		2	1		5	5		1	6		
장기면			13			13	6	2	5	4		9	11	1	1	12	1	
의당면			7			7			7			7	6		1	7		
청원군	4	6	24	0	0	32	9	5	20	6	1	25	19	2	13	23	3	8
부용면	4	6	19			27	8	4	17	6		21	16	1	12	19	2	8
강내면			5			5	1	1	3		1	4	3	1	1	4	1	

구 분	어린이놀이터			탁아소			공동목욕탕			생활체육시설			마을공동마당			일용품 판매점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전 체	14	3	111	2		125	9		119	15		112	36	3	91	26	1	102
연기군	9	2	58	1	0	66	6	0	62	8	0	60	26	3	42	17	1	52
금남면	4		29	1		30	5		27	5		27	16	1	17	7		26
남면	2		3			5			5			5	1		4			5
동면	3	2	14			19			19	2		17	6	2	12	3	1	16
서면			12			12	1		11	1		11	3		9	7		5
공주시	2	1	23	0	0	26	0	0	26	4	0	22	3	0	22	8	0	18
반포면			6			6			6	1		5			6			6
장기면	1	1	11			13			13	2		11	2		10	5		8
의당면	1		6			7			7	1		6	1		6	3		4
청원군	3	0	30	1	0	33	3	0	31	3	0	30	7	0	27	1	0	32
부용면	3		25	1		28	3		26	2		26	6		23	1		27
강내면			5			5			5	1		4	1		4			5

구 분	약국			보건지소			도서관			오락시설 (노래방 등)			학교급식시설			학교버스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전 체	19		113	22	2	108	11	1	120	17		114	26	3	102	43	5	81
연기군	9	0	63	10	2	60	4	1	67	8	0	63	15	3	53	35	5	31
금남면	7		28	8		27	4		31	5		29	10		25	18	1	15
남면			5			5			5			5	1	1	3			5
동면			20		2	18		1	19	1		19	1	1	17	10	3	7
서면	2		10	2		10			12	2		10	3	1	8	7	1	4
공주시	2	0	24	4	0	22	1	0	25	3	0	23	3	0	23	6	0	20
반포면			6			6			6	1		5			6	2		4
장기면	1		12	3		10	1		12	2		11	2		11	2		11
의당면	1		6	1		6			7			7	1		6	2		5
청원군	8	0	26	8	0	26	6	0	28	6	0	28	8	0	26	2	0	30
부용면	8		21	7		22	6		23	6		23	8		21	1		26
강내면			5	1		4			5			5			5	1		4

구 분	유아원·유치원			경지정리			수리시설			하천정비			공동작업장			공동건조장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전 체	24	3	104	63	7	58	56	8	65	38	13	79	10	1	118	6	1	122
연기군	13	2	56	38	4	28	32	7	31	23	8	40	5	1	64	1	1	68
금남면	5		29	13		20	13	1	19	9	2	23	2		31	1		32
남면	1		4	2		3		2	3	2		3	2		3			5
동면	5	1	14	13	3	4	10	4	6	8	3	9		1	19		1	19
서면	2	1	9	10	1	1	9		3	4	3	5	1		11			12
공주시	3	0	23	14	2	10	12	0	14	8	3	15	1	0	25	2	0	24
반포면			6			6	2		4			6			6			6
장기면	2		11	8	2	3	3		10	4	2	7			13			13
의당면	1		6	6		1	7			4	1	2	1		6	2		5
청원군	8	1	25	11	1	20	12	1	20	7	2	24	4	0	29	3	0	30
부용면	8	1	20	8	1	18	9		19	5	2	21	4		24	3		25
강내면			5	3		2	3	1	1	2		3			5			5

구 분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공동집하 출하장			농기계보관소			정미소			농산물 가공공장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기 설 치	설 치 중	미 설 치
전 체	23	3	103	10		118	9		118	25	3	101	21	2	107	8	2	120
연기군	13	3	54	3	0	67	5	0	64	15	2	53	14	2	55	4	2	65
금남면	6		27	2		31	3		29	6		27	7	1	26	3	1	30
남면	1		4			5	1		4	1		4	1		4			5
동면	4	2	14			20			20	4	2	14	3	1	16	1	1	18
서면	2	1	9	1		11	1		11	4		8	3		9			12
공주시	4	0	22	2	0	24	2	0	24	5	0	21	1	0	25	2	0	24
반포면	1		5			6	1		5			6			6	1		5
장기면	2		11	1		12	1		12	2		11			13			13
의당면	1		6	1		6			7	3		4	1		6	1		6
청원군	6	0	27	5	0	27	2	0	30	5	1	27	6	0	27	2	0	31
부용면	6		22	4		23	2		25	3	1	24	3		25	2		26
강내면			5	1		4			5	2		3	3		2			5

2. 리별 시설·서비스의 설치·제공 여부 (○:기설치, △:설치중, x:미설치)

1) 연기군

연기군 금남면1	리 사무소	마을 쉼터	상수도	간이 상수도	하수도	마을 하수도	오수처 리시설	쓰레기 처리장	초고속 인터넷 망	마을 버스	마을 회관	노인 회관
감성리	○	○	×	×	○	○	○	×	×	×	○	○
금천1리	×	×	×	×	×	×	×	×	×	×	○	○
금천2리	×	○	×	×	×	×	○	○	○	×	×	×
남곡리	○	×	×	×	×	×	×	×	×	○	○	○
달전리	△	△	△	×	×	△	×	×	×	△	△	△
대박리	○	×	×	×	×	×	×	×	○	○	○	○
대평리	×	×	○	×	△	×	×	×	×	×	×	×
도암1리	×	○	×	×	×	×	×	×	×	○	○	○
도암2리	×	×	○	○	×	×	×	×	×	○	○	○
두만1리	×	×	×	○	×	×	×	×	×	×	○	○
두만2리	○	×	×	○	×	×	×	×	×	×	○	○
박산리	×	×	×	×	×	○	×	×	×	○	○	○
발산리	×	×	○	×	○	×	×	×	×	×	○	○
부용1리	○	×	×	○	×	×	×	×	×	○	○	○
부용2리	○	×	○	○	×	×	×	×	×	×	○	○
성덕1리	○	○	×	○	×	×	×	×	×	○	○	○
성덕2리	×	×	×	×	×	○	×	×	×	×	○	○
신촌리	○	×	○	×	△	△	×	×	×	×	○	○
영곡1리	○	×	×	×	×	×	×	×	○	△	○	○
영곡2리	×	×	×	○	×	×	○	×	○	○	○	○
영대1리	×	×	△	△	×	×	×	×	×	△	×	×
영대2리	×	×	×	○	×	×	×	×	×	×	○	○
영치리	×	×	×	×	×	×	×	×	×	×	○	○
용담1리	×	×	×	×	×	×	×	×	○	○	○	○
용담2리	○	×	○		△	△	×	×	○	×	○	○
용포1리	○	○	○	×	○	○	×	×	○	×	×	×
용포2리	○	×	○	×	○	○	×	×	○	○	○	○
용포3리	×	×	○	×	×	×	×	×	○			○
용포4리	○	○	○	×	○	○	×	×	△	×	○	○
용포5리	○		○		○							○
장재리	×	×	×	○	×	×	×	×	○	×	○	○
축산리	○	○	○	○	×	×	×	×	×		○	
호탄리	×	×	×	×	×	×	×	×	×	×	○	○
황용1리	○	×		○	×	×	×	×	×	○	○	○
황용2리	○	×	○	○	×	×	×	×	×	×	○	○

연기군 금남면2	어린이 놀이터	탁아소	공동 목욕탕	생활체 육시설	마을 공동 마당	일용품 판매점	약국	보건 지소	도서관	오락 시설	학교 급식 시설	학교 버스
감성리	×	×	×	×	○	×	○	×	×	×	○	○
금천1리	×	×	×	×	○	○	×	×	×	×	×	○
금천2리	○	○	○	○	×	○	○	○	○	○	○	○
남곡리	×	×	×	×	○	×	×	○	×	×	×	○
달전리	×	×	×	×	×	×	×	×	×	×	×	×
대박리	×	×	×	×	○	×	×	×	×	×	×	○
대평리	×	×	×	×	×	×	×	×	×	×	×	△
도암1리	×	×	○	○	○	○	×	×	×	○	○	○
도암2리	×	×	×	×	×	×	×	×	×	×	×	×
두만1리	×	×	×	×	×	×	×	×	×	×	×	×
두만2리	×	×	×	×	×	×	×	×	×	×	×	×
박산리	×	×	×	×	△	×	×	×	×	×	○	○
발산리	×	×	×	×	×	×	×	×	×	×	×	×
부용1리	×	×	×	×	○	×	×	×	×	×	○	○
부용2리	×	×	×	×	×	×	×	×	×	×	×	×
성덕1리	×	×	×	×	×	○	×	×	×	×	×	○
성덕2리	×	×	×	×	×	×	×	×	×	×	×	×
신촌리	×	×	×	×	○	×	×	×	×	×	○	○
영곡1리	×	×	×	×	×	×	×	×	×	×	×	○
영곡2리	×	×	×	×	○	×	×	×	×	×	×	×
영대1리	×	×	×	×	×	×	×	×	×	×	×	×
영대2리	×	×	×	×	×	×	×	○	×	×	×	○
영치리	×	×	×	×	○	×	×	×	×	×	×	×
용담1리	○	×	×	×	○	×	×	×	×	×	○	×
용담2리					○	×	×	×	×	×	×	×
용포1리	×	×	○	○	○	○	○	○	○	○	○	○
용포2리	×	×	○	○	×	○	○	○	×	○	○	○
용포3리					○		○	×	○	×	×	
용포4리	○	×	×	×	×	×	×	×	×	×	×	×
용포5리	○						○	○	○	○	○	○
장재리	×	×	×	×	○	×	×	×	×	×	×	○
축산리	×	×	×	×	○	×	×	×	×	×	×	○
호탄리	×	×	×	×	×	×	×	×	×	×	×	×
황용1리	×		○	○	○	○	×	○	×		×	○
황용2리	×	×	×	×	×	×	○	○	×	×	×	×

연기군 금남면3	유아원 유치원	경지 정리	수리 시설	하천 정비	공동 작업장	공동 건조장	공동 창고	공동 저장고	공동 집하 출하장	농기계 보관소	정미소	농산물 가공 공장
감성리	×	×	○	×	×	×	○	×		○	○	×
금천1리	×	×	×	×	×	×	×	×	×	○	○	×
금천2리	○	○	○	○	○	○	×	○	○	×	○	○
남곡리	×	×	×	×	×	×	×	×	×	×	×	×
달전리	×	×	×	×	×	×	×	×	×	×	△	△
대박리	×	○	○	○	×	×	×	×	×	×	○	×
대평리	×	○	○	○	×	×	×	×	×	×	×	×
도암1리	○	×	×	×	×	×	×	×	○	×	×	×
도암2리	×	×	×	×	×	×	×	×	×	×	×	×
두만1리	×	×	○	○	×	×	×	×	×	×	×	×
두만2리	×	×	×	×	×	×	×	×	×	×	×	×
박산리	×	○	×	×	×	×	×	×	×	×	×	×
발산리	×	×	○	○	×	×	○	×	×	○	×	×
부용1리	×	○	○	×	×	×	×	×	×	×	×	×
부용2리	×	×	×	×	×	×	×	×	×	×	×	×
성덕1리	×	×	×	×	×	×	○	×	×	○	×	×
성덕2리	×	×	×	×	×	×	×	×	×	×	×	×
신촌리	×	○	○	○	×	×	○	×	×	○	×	×
영곡1리	×	×	×	×	×	×	×	×	×	×	×	×
영곡2리	×	×	×	×	×	×	×	×	×	×	×	×
영대1리	×	×	×	×	×	×	×	×	×	×	×	×
영대2리	×	×	×	×	×	×	×	×	×	×	○	×
영치리	×	×	×	×	×	×	×	×	×	×	×	×
용담1리	×	×	×	△	×	×	×	×	×	×	×	×
용담2리	×	×	×	×	×	×	×	×	×	×	×	×
용포1리	○	○	○	○	○	×	○	○	○	○	○	○
용포2리	○	○	○	×	×	×	×	×	×	×	×	×
용포3리												
용포4리	×	○	○	○	×	×	○	×	×	×	×	×
용포5리	○			○							○	○
장재리	×	○	○	×	×	×	×	×	×	×	×	×
축산리	×	×	×	×	×	×	×	×	×	×	×	×
호탄리	×	○	○	×	×	×	×	×	×	×	×	×
황용1리	×	○	×	△	×	×	×	×	×	×	×	×
황용2리	×	○	△	×	×	×	×	×	×	×	×	×

연기군 남면1	리 사무소	마을 쉼터	상수도	간이 상수도	하수도	마을 하수도	오수처 리시설	쓰레기 처리장	초고속 인터넷 망	마을 버스	마을 회관	노인 회관
놀왕2리	○	×	×	△	△	○	○	×	×	○	○	○
보통1리	○	×	×	×	×	×	×	×	×	○	○	○
보통2리	×	×	○	○	×	×	×	×	○	×	○	○
수산리	○	○	×	×	○	○	×	×	×	○	○	○
연기2리	×	×	×	○	△	○	×	×	○	×	○	○

연기군 남면2	어린이 놀이터	탁아소	공동 목욕탕	생활체 육시설	마을 공동 마당	일용품 판매점	약국	보건 지소	도서관	오락 시설	학교 급식 시설	학교 버스
놀왕2리	○	×	×	×	×	×	×	×	×	×	○	×
보통1리	×	×	×	×	×	×	×	×	×	×	×	×
보통2리	×	×	×	×	×	×	×	×	×	×	×	×
수산리	○	×	×	×	○	×	×	×	×	×	△	×
연기2리	×	×	×	×	×	×	×	×	×	×	×	×

연기군 남면3	유아원 유치원	경지 정리	수리 시설	하천 정비	공동 작업장	공동 건조장	공동 창고	공동 저장고	공동 집하 출하장	농기계 보관소	정미소	농산물 가공 공장
놀왕2리	×	×	△	○	○	×	○	×	×	○	○	×
보통1리	×	○	×	×	×	×	×	×	×	×	×	×
보통2리	×	×	×	×	×	×	×	×	×	×	×	×
수산리	○	×	×	×	○	×	×	×	○	×	×	×
연기2리	×	○	△	○	×	×	×	×	×	×	×	×

연기군 동면1	리 사무소	마을 쉼터	상수도	간이 상수도	하수도	마을 하수도	오수처 리시설	쓰레기 처리장	초고속 인터넷 망	마을 버스	마을 회관	노인 회관
내판1리	△	×	○	×	△	△	△	△	×	×	△	△
내판2리	×	×	×	○	×	×	×	×	×	×	○	○
내판3리	○	△	○	○	○	○	×	×	○	×	○	○
내판4리		×	○		○		×	×	×	○	○	○
내판5리	△	△	×	×	×	△	×	×	△	×	○	○
노송1리	×	×	○	○	○	○	×	×	×	×	○	×
노송2리	×	×	×	○	×	○	△	×	○	×	○	○
명학1리	○	×	×	○	×	×	×	×	×	×	○	○
명학2리	×	×	×	○	○	○	○	×	○	○	○	○
명학3리	○	×	○	○	×	×	×	×	×	×	○	○
명학4리	○	○	○	○	○	○	○	○	○	○	○	○
송용1리	×	×	○	×	○	○	×	×	○	×	×	×
송용2리	○	×	○	○	○	○	×	×	○	×	○	○
송용3리	×	×	×	○	×	×	×	×	×	○	○	×
예양1리	×	×	○	○	○	○	○	×	×	×	○	×
예양2리	×	×	×	○	×	×	×	×	○	○	○	○
응암1리	×	×	○		×	×	×	×	×		△	×
응암2리	×	×	×	○	×	×	×	×	×	×	○	○
응암3리	×	×	△	△	△	△	△	△	△	×	△	△
응암4리	○	×	×	○	×	△	×	×	×	○	○	○

연기군 동면2	어린이 놀이터	탁아소	공동 목욕탕	생활체 육시설	마을 공동 마당	일용품 판매점	약국	보건 지소	도서관	오락 시설	학교 급식 시설	학교 버스
내판1리	×	×	×	×	×	△	×	△	△	×	△	△
내판2리	×	×	×	×	×	×	×	×	×	○	×	×
내판3리					○	○	×	×	×	×	×	×
내판4리	○	×	×	×	○	×	×	×	×	×	×	○
내판5리	△	×	×	×	△	×	×	△	×	×	×	×
노송1리	△	×	×	○	○	×	×	×	×	×	×	×
노송2리	×	×	×	×	×	×	×	×	×	×	×	○
명학1리	×	×	×	×	×	×	×	×	×	×	×	×
명학2리	○	×	×	×	×	○	×	×	×	×	×	○
명학3리	×	×	×	×	×	×	×	×	×	×	×	○
명학4리	○	×	×	○	○	○	×	×	×	×	×	○
송용1리	×	×	×	×	×	×	×	×	×	×	○	○
송용2리	×	×	×	×	○	×	×	×	×	×	×	○
송용3리	×	×	×	×	×	×	×	×	×	×	×	○
예양1리	×	×	×	×	×	×	×	×	×	×	×	×
예양2리	×	×	×	×	×	×	×	×	×	×	×	○
응암1리	×	×	×	×	×	×	×	×	×	×		△
응암2리	×	×	×	×	×	×	×	×	×	×	×	△
응암3리	×	×	×	×	2	×	×	×	×	×	×	×
응암4리	×	×	×	×	○	×	×	×	×	×	×	○

연기군 동면3	유아원 유치원	경지 정리	수리 시설	하천 정비	공동 작업장	공동 건조장	공동 창고	공동 저장고	공동 집하 출하장	농기계 보관소	정미소	농산물 가공 공장
내판1리	△	△	△	△	×	×	×	×	×	×	×	△
내판2리	×	×	×	×	×	×	×	×	×	×	×	×
내판3리	×	×	○	○	×	×	×	×	×	×	×	×
내판4리	×	○	○	○	×	×	×	×	×	○	○	×
내판5리	×	△	△	△	△	△	△	×	×	×	×	×
노송1리	×	×	×	×	×	×	○	×	×	○	×	×
노송2리	○	○	○	○	×	×	○	×	×	○	×	×
명학1리	○	○	×	×	×	×	×	×	×	×	×	×
명학2리	○	○	○	○	×	×	×	×	×	×	×	×
명학3리	×	○	×	△	×	×	×	×	×	×	×	×
명학4리	○	×	×	×	×	×	×	×	×	×	×	×
송용1리	○	○	○	○	×	×	×	×	×	×	×	×
송용2리	×	○	○	○	×	×	×	×	×	○	○	×
송용3리	×	○	△	×	×	×	○	×	×	×	×	×
예양1리	×	○	○	○	×	×	×	×	×	×	○	○
예양2리	×	○	○	×	×	×	○	×	×	×	×	×
응암1리	×	△	△	×	×	×	×	×	×	×	×	×
응암2리	×	○	○	×	×	×	×	×	×	△	×	×
응암3리	×	○	×	×	×	×	△	×	×	△	△	×
응암4리	×	○	○	○	×	×	×	×	×	×	×	×

연기군 서면1	리 사무소	마을 쉼터	상수도	간이 상수도	하수도	마을 하수도	오수처 리시설	쓰레기 처리장	초고속 인터넷 망	마을 버스	마을 회관	노인 회관
국촌리	×	×	×	×	○	○	○	×	△	○	○	○
기룡리	×	×	×	○	×	×	×	×	×	×	○	○
봉암1리	×	×	×	×	×	○	×	×	×	○	○	○
봉암2리	○	×	×	×	×	×	×	×	×	○	○	○
봉암3리	○	×	×	×	×	×	×	×	○	×	×	×
부동리	○	×	×	×	△	△	△	×	○	○	○	○
성제리	×	×	×	○	×	×	×	×	×	×	○	○
신대1리	○	×	×	○	△	△	×	×	×	×	○	○
신대2리	○	×	×	○	×	×	×	×	×	×	○	○
와촌1리	×	×	×	○	○	○	×	×	×	×	×	○
와촌2리	×	×	○	○	○	×	×	×	×	×	×	○
와촌3리	×	×	×	○	×	×	×	×	×	×	×	○

연기군 서면2	어린이 놀이터	탁아소	공동 목욕탕	생활체 육시설	마을 공동 마당	일용품 판매점	약국	보건 지소	도서관	오락 시설	학교 급식 시설	학교 버스
국촌리	×	×	×	×	○	○	×	×	×	×	×	○
기룡리	×	×	×	×	×	○	×	×	×	○	×	×
봉암1리	×	×	○	×	×	○	○	×	×	○	○	○
봉암2리	×	×	×	×	○	×	○	×	×	×	○	○
봉암3리	×	×	×	×	×	×	×	×	×	×	×	○
부동리	×	×	×	×	×	○	×	×	×	×	×	○
성제리	×	×	×	×	×	×	×	○	×	×	○	×
신대1리	×	×	×	×	×	○	×	×	×	×	△	△
신대2리	×	×	×	×	×	×	×	×	×	×	×	×
와촌1리	×	×	×	×	○	○	×	×	×	×	×	○
와촌2리	×	×	×	○	×	○	×	○	×	×	×	×
와촌3리	×	×	×	×	×	×	×	×	×	×	×	○

연기군 서면3	유아원 유치원	경지 정리	수리 시설	하천 정비	공동 작업장	공동 건조장	공동 창고	공동 저장고	공동 집하 출하장	농기계 보관소	정미소	농산물 가공 공장
국촌리	×	○	○	△	○	×	△	○	○	○	×	×
기룡리	×	○	×	×	×	×	×	×	×	×	○	×
봉암1리	○	○	○	○	×	×	×	×	×	×	×	×
봉암2리	×	○	○	△	×	×	×	×	×	×	×	×
봉암3리	×	○	○	○	×	×	×	×	×	×	×	×
부동리	×	△	○	○	×	×	×	×	×	×	×	×
성제리	○	○	○	○	×	×	×	×	×	×	○	×
신대1리	△	○	×	△	×	×	○	×	×	○	×	×
신대2리	×	○	×	×	×	×	×	×	×	○	×	×
와촌1리	×	○	○	×	×	×	×	×	×	×	○	×
와촌2리	×	○	○	×	×	×	○	×	×	○	×	×
와촌3리	×	×	○	×	×	×	×	×	×	×	×	×

2) 공주시

공주시 반포면1	리 사무소	마을 쉼터	상수도	간이 상수도	하수도	마을 하수도	오수처 리시설	쓰레기 처리장	초고속 인터넷망	마을 버스	마을 회관	노인 회관
국곡리	○	○	○	○	×	×	×	×	○	×	○	○
도남리	×	×	○	×	×	×	×	×	×	×	○	○
봉암리	○	○	○	○	×	×	×	×	○	×	○	○
성강리	×	×	×	×	×	×	×	×	×	×	×	○
원봉1리	×	○	×	○	×	×	×	×	○	○	○	○
원봉2리	×	×	×	○	×	×	×	×	○	×	○	○

공주시 반포면2	어린이 놀이터	탁아소	공동 목욕탕	생활체 육시설	마을 공동 마당	일용품 판매점	약국	보건 지소	도서관	오락 시설	학교 급식 시설	학교 버스
국곡리	×	×	×	×	×	×	×	×	×	○	×	×
도남리	×	×	×	×	×	×	×	×	×	×	×	×
봉암리	×	×	×	×	×	×	×	×	×	×	×	×
성강리	×	×	×	×	×	×	×	×	×	×	×	×
원봉1리	×	×	×	○	×	×	×	×	×	×	×	○
원봉2리	×	×	×	×	×	×	×	×	×	×	×	○

공주시 반포면3	유아원 유치원	경지 정리	수리 시설	하천 정비	공동 작업장	공동 건조장	공동 창고	공동 저장고	공동 집하 출하장	농기계 보관소	정미소	농산물 가공 공장
국곡리	×	×	×	×	×	×	×	×	×	×	×	×
도남리	×	×	○	×	×	×	×	×	×	×	×	×
봉암리	×	×	○	×	×	×	×	×	×	×	×	×
성강리	×	×	×	×	×	×	×	×	×	×	×	×
원봉1리	×	×	×	×	×	×	○	×	○	×	×	×
원봉2리	×	×	×	×	×	×	×	×	×	×	×	○

공주시 장기면1	리 사무소	마을 쉼터	상수도	간이 상수도	하수도	마을 하수도	오수처 리시설	쓰레기 처리장	초고속 인터넷 망	마을 버스	마을 회관	노인 회관
금암리	×	×	×	×	×	×	×	×	○	×	○	○
대교1리	×	○	△	×	×	×	×	×	×	○	○	○
대교2리	○	×	×	×	×	×	×	×	×	○	○	○
대교3리	○	○	×	×	×	△	×	×	×	×	○	○
도계1리	○	×	○	×	○	○	×	×	○	×	○	○
도계2리	○	×	○	○	○	○	×	×	○	○	○	○
봉안리	×	○	×	×	△	×	×	×	△	×	△	△
산학리	○	×	×	○	△	×	×	×	△	×	○	○
송문리	×	×	△	△	×	×	×	×	×	×	○	○
은용1리	×	×	×	○	×	×	×	×	×	×	○	○
은용2리	×	×	○	×	×	×	×	×	○	×	×	○
평기리	×	○	×	○	○	○	×	×	○	○	○	○
하봉리	×	×	×	×	×	×	×	×	○	×	○	○

공주시 장기면2	어린이 놀이터	탁아소	공동 목욕탕	생활체 육시설	마을 공동 마당	일용품 판매점	약국	보건 지소	도서관	오락 시설	학교 급식 시설	학교 버스
금암리	×	×	×	×	×	○	×	○	×	○	×	×
대교1리	×	×	×	×	×	×	×	×	×	×	×	×
대교2리	×	×	×	○	○	×	×	×	×	×	×	×
대교3리	×	×	×	×	×	×	×	×	×	×	×	×
도계1리	×	×	×	×	×	○	×	○	×	×	○	○
도계2리	×	×	×	×	×	○	○	○	×	○	○	○
봉안리	△	×	×	○	×	×	×	×	×	×	×	×
산학리	×	×	×	×	○	×	×	×	×	×	×	×
송문리	×	×	×	×	×	×	×	×	×	×	×	×
은용1리	×	×	×	×	×	×	×	×	×	×	×	×
은용2리	×	×	×	×	×	×	×	×	×	×	×	×
평기리	○	×	×	×		○	×	×	○	×	×	×
하봉리	×	×	×	×	×	○	×	×	×	×	×	×

공주시 장기면3	유아원 유치원	경지 정리	수리 시설	하천 정비	공동 작업장	공동 건조장	공동 창고	공동 저장고	공동 집하 출하장	농기계 보관소	정미소	농산물 가공 공장
금암리	×	×	×	×	×	×	×	×	×	×	×	×
대교1리	×	○	○	○	×	×	×	×	×	×	×	×
대교2리	×	○	×	×	×	×	×	×	×	×	×	×
대교3리	×	△	×	○	×	×	×	×	×	×	×	×
도계1리	○	○	×	○	×	×	×	×	×	×	×	×
도계2리	○	○	×	×	×	×	×	×	×	×	×	×
봉안리	×	○	○	○	×	×	○	×	○	○	×	×
산학리	×	○	×	△	×	×	×	×	×	×	×	×
송문리	×	○	○	×	×	×	×	×	×	○	×	×
은용1리	×	×	×	×	×	×	×	×	×	×	×	×
은용2리	×	×	×	×	×	×	×	×	×	×	×	×
평기리	×	△	×	△	×	×	○	○	×	×	×	×
하봉리	×	○	×	×	×	×	×	×	×	×	×	×

공주시 의당면1	리 사무소	마을 쉼터	상수도	간이 상수도	하수도	마을 하수도	오수처 리시설	쓰레기 처리장	초고속 인터넷 망	마을 버스	마을 회관	노인 회관
송정리	○	○	×	×	×	○	×	×	×	×	○	○
송학1리	○	○	×	○	×	○	×	×	×	×	○	○
송학2리	○	○	○	○	○	○	×	×	×	×	×	○
용암1리	○	○	×	×	×	×	×	×	×	×	○	○
용암2리	○	×	×	○	×	○	×	×	×	×	○	○
용현리	○	○	×	×	×	○	×	×	×	×	○	○
태산리	○	○	×	×	×	○	×	×	×	×	○	○

공주시 의당면2	어린이 놀이터	탁아소	공동 목욕탕	생활체 육시설	마을 공동 마당	일용품 판매점	약국	보건 지소	도서관	오락 시설	학교 급식 시설	학교 버스
송정리	×	×	×	×	×	×	×	×	×	×	×	×
송학1리	×	×	×	×	×	○	○	×	×	×	×	×
송학2리	×	×	×	×	×	○	×	○	×	×	×	×
용암1리	×	×	×	×	×	○	×	×	×	×	×	○
용암2리	×	×	×	×	×	×	×	×	×	×	×	×
용현리	○	×	×	○	○	×	×	×	×	×	×	×
태산리	×	×	×	×	×	×	×	×	×	×	○	○

공주시 의당면3	유아원 유치원	경지 정리	수리 시설	하천 정비	공동 작업장	공동 건조장	공동 창고	공동 저장고	공동 집하 출하장	농기계 보관소	정미소	농산물 가공 공장
송정리	×	○	○	×	×	×	×	×	×	○	×	×
송학1리	×	○	○	○	×	○	×	×	×	×	×	×
송학2리	×	○	○	×	×	×	×	×	×	×	×	×
용암1리	×	○	○	△	×	○	○	○	×	○	×	×
용암2리	×	×	○	○	×	×	×	×	×	×	×	×
용현리	×	○	○	○	○	×	×	×	×	○	○	○
태산리	○	○	○	○	×	×	×	×	×	×	×	×

3) 청원군

청원군 부용면1	리 사무소	마을 쉼터	상수도	간이 상수도	하수도	마을 하수도	오수처 리시설	쓰레기 처리장	초고속 인터넷 망	마을 버스	마을 회관	노인 회관
갈산1리	×	×	×	○	×	×	×	×	×	×	○	○
갈산2리	×	×	×	○	×	×	×	×	×	×	×	○
금호1리	×	×	×	○	×	×	○	×	○	○	○	○
금호2리	×	△	×	△	×	×	×	×	×	×	×	○
금호3리	×	×	×	○	×	×	×	×	×	○	○	○
노호1리	○	×	×	○	×	×	×	×	×	○	○	○
노호2리	×	△	×	△	△	△	×	×	△	×	△	△
등곡1리	○	×	○	○	○	○	○	×	×	×	○	○
등곡2리	×	×	×	×	×	×	×	×	○	×	○	×
등곡3리	○	×	×	○	×	×	×	×	○	×	×	○
문곡1리	○	×	○	○	○	○	×	×	×	×	○	○
문곡2리	×	×	×	○	○	○	×	×	×		○	×
문곡3리	×	×	×	×	×		×	×	×	×	○	○
부강1리	×	×	○	×	○	×	×	×	×	×	×	×
부강2리	×	×	○	×	×	×	△	×	×	×	×	×
부강3리	×	×	○		○	○	△	×	△	×	×	△
부강4리	○	○	○	×	×	×	△	×	○	×	○	○
부강5리		×	○	○	○	○	×	×	○	×	×	×
부강6리	○	×	○		○	○	×	×	△	○	○	○
부강7리	×	×	○	○	○	○	×	×	×	×	×	×
부강8리	×	×	○		○	○	×	×	×	×	○	○
부강9리	×	○	×	×	×	×	×	×	×	×	○	○
부강10리		×	○	○	×	×	△	×	×	×	×	×
부강11리	○	×	○	×	○	○	○	×	○	○	○	○
부강12리	○	△	○		○	×	△		○	×	×	○
부강13리	×	×	○	×	○	×	△	×	△	×	×	×
산수리		○	○	○	○	○	○		○	○	○	○
행산1리	×	×	○	×	×	×	×	×	×		○	○
행산2리	×	×	×	○	×	△	×	×	×	×	×	○

청원군 부용면2	어린이 놀이터	탁아소	공동 목욕탕	생활체 육시설	마을 공동 마당	일용품 판매점	약국	보건 지소	도서관	오락 시설	학교 급식 시설	학교 버스
갈산1리	×	×	×	×	×	×	×	×	×	×	×	×
갈산2리	×	×	×	×	×	×	×	×	×	×	×	×
금호1리	×	×	×	×	×	×	×	×	×	×	×	×
금호2리	×	×	×	×	×	×	×	×	×	×	×	×
금호3리	×	×	×	×	×	×	×	×	×	×	×	×
노호1리	×	×	×	×	○	×	×	×	×	×	×	×
노호2리	×	×	×	×	×	×	×	×	×	×	×	×
등곡1리	×	×	×	×	×	×	×	×	×	×	×	×
등곡2리	×	×	×	×	×	×	×	×	×	×	×	×
등곡3리	×	×	×	×	×	×	×	×	×	×	×	×
문곡1리	×	×	×	×	×	×	×	×	×	×	×	×
문곡2리	×	×	×	×	×	×	×	×	×	×	×	×
문곡3리	○	×	×		○	×	×	×	×	×	×	×
부강1리	×	×	×	×	×	×	×	×	×	×	×	×
부강2리	×	×	×	×	×	○	○	×	×	○	○	×
부강3리	×	×	×	×	×	×	○	×	×	○	×	×
부강4리	×	×	×	○	×	×	○	○	○	×	○	×
부강5리	×	×	×	×	×	×	○	○	○	×	○	×
부강6리	×	×	○	×	×	×	○	○	○	○	○	×
부강7리	×	×	×	×	×	×	×	×	×	×	×	×
부강8리	×	×	×	×	○	×	×	×	×	×	×	×
부강9리	×	×	×	×	○	×	×	×	×	×	×	×
부강10리	×	×	×	×	×	×	×	○	○	○	×	
부강11리		×	○	×	○	×	○	○	○	○	○	×
부강12리	○	×	×	×	×	×	○	○	×	×	○	
부강13리	×	×	×	×	×	×	×	×	×	×	×	×
산수리	○	○	○	○	○		○	○	○	○	○	○
행산1리	×	×	×	×	×	×	×	×	×	×	○	×
행산2리	×	×	×	×	×	×	×	×	×	×	×	×

청원군 부용면3	유아원 유치원	경지 정리	수리 시설	하천 정비	공동 작업장	공동 건조장	공동 창고	공동 저장고	공동 집하 출하장	농기계 보관소	정미소	농산물 가공 공장
갈산1리	×	×	○	×	×	×	×	×	×	△	×	×
갈산2리	×	○	○	△	×	×	○	×	×	×	×	×
금호1리	×	○	○	×	×	×	×	×	×	×	×	×
금호2리	×	○	○	×	×	×	×	×	×	×	×	×
금호3리	×	×	○	○	○	×	×	○	○	○	×	×
노호1리	×	○	○	△	×	×	○	○	×	×	×	×
노호2리	×	△	×	×	×	×	×	×	×	×	×	×
등곡1리	×	×	×	○	×	×	×	×	×	×	×	×
등곡2리	×	×	×	×	×	×	×	×	×	×	×	×
등곡3리	×	×	×	×	×	○	○	○	×	×	×	×
문곡1리	○	×	×	×	×	×	×	×	×	×	×	×
문곡2리	×	×	×	×	×	×	×	×	×	×	×	×
문곡3리	○	×	×	×	×	×	×	×	×	×	×	×
부강1리	×	×	×	×	×	×	×	×	×	×	○	×
부강2리	×	×	×	×	×	×	×	×	×	×	×	×
부강3리	×	×	×	×	×	×	×	×	×	×	×	×
부강4리	○	×	×	×	×	×	×	×	×	×	×	×
부강5리	○	○	○	○	×	×	×	×	×	×	×	×
부강6리	○	×	×	×	×	×	×	×	×	×	×	×
부강7리	×	×	×	×	×	×	×	×	×	×	×	×
부강8리	×	×	×	×	○	×	×	×	×	×	×	×
부강9리	×	×	×	×	×	×	×	×	×	×	×	×
부강10리	×	○	×	○	○	○	○	○	○	○	○	○
부강11리	○	×	×	×	×	×	○	×	×	×	×	×
부강12리	○											
부강13리	△	×	×	×	×	×	×	×	×	×	×	×
산수리	○		○	○	○	○	○			○	○	○
행산1리	×	○	×	×	×	×	×	×	×	×	×	×
행산2리	×	○	○	×	×	×	×	×	×	×	×	×

청원군 강내면1	리 사무소	마을 쉼터	상수도	간이 상수도	하수도	마을 하수도	오수처 리시설	쓰레기 처리장	초고속 인터넷 망	마을 버스	마을 회관	노인 회관
당곡리	×	×	×	○	×	△	×	×	×	×	○	○
사곡1리	×	×	×	×	×	×	×	×	×	×	×	○
사곡2리	○	○	×	△	△	△	×	×	○	×	○	○
저산1리	○	×	×	○	×	○	×	×	×	×	○	○
저산2리	×	×	×	○	×	×	×	×	△	△	△	△

청원군 강내면2	어린이 놀이 터	탁아 소	공동 목욕 탕	생활 체육 시설	마을 공동 마당	일용 품 판매 점	약국	보건 지소	도서 관	오락 시설	학교 급식 시설	학교 버스
당곡리	×	×	×	×	×	×	×	×	×	×	×	○
사곡1리	×	×	×	×	×	×	×	○	×	×	×	×
사곡2리	×	×	×	○	○	×	×	×	×	×	×	×
저산1리	×	×	×	×	×	×	×	×	×	×	×	×
저산2리	×	×	×	×	×	×	×	×	×	×	×	×

청원군 강내면3	유아원 유치원	경지 정리	수리 시설	하천 정비	공동 작업장	공동 건조장	공동 창고	공동 저장고	공동 집하 출하장	농기계 보관소	정미소	농산물 가공 공장
당곡리	×	○	○	×	×	×	×	×	×	×	×	×
사곡1리	×	×	×	×	×	×	×	×	×	×	○	×
사곡2리	×	×	△	○	×	×	×	×	×	○	×	×
저산1리	×	○	○	○	×	×	×	×	×	○	○	×
저산2리	×	○	○	×	×	×	×	○	×	×	○	×

2. 생활여건 및 생산기반 확충 필요성

구 분		U1	U2	U3	U4	U5	U6	U7	U8	U10	U11	U12	U14	U15	U16	U17	U18	U19	U20	U22	U23	U24	U25	U26	U27
연 기 군	Mean	2.06	2.14	2.25	2.28	2.22	2.23	2.51	1.99	2.36	2.36	2.33	2.77	2.43	2.64	2.47	2.13	2.30	2.71	2.31	2.60	2.01	1.83	2.09	2.16
	N	70	70	69	69	69	70	70	70	70	69	70	70	70	70	70	69	70	70	70	70	70	70	70	70
	Variance	.721	.994	1.100	1.144	1.202	1.135	1.123	.710	1.016	1.176	1.209	1.599	1.089	1.682	1.441	1.447	1.421	1.596	1.407	1.838	1.087	.811	.891	1.178
공 주 시	Mean	1.58	1.85	1.58	1.38	1.35	1.88	1.85	1.85	1.81	2.15	1.77	2.12	1.85	1.58	2.12	1.81	1.69	2.15	1.96	1.62	1.42	1.73	1.77	1.85
	N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Variance	.894	1.095	.734	.406	.555	1.146	.855	.695	1.202	1.655	1.145	1.786	.935	.494	1.226	1.442	1.022	1.975	1.398	.966	.494	1.245	1.145	1.335
청 원 군	Mean	1.82	2.42	2.41	2.18	1.97	2.21	2.68	2.00	2.09	2.53	2.19	2.90	2.59	2.28	2.45	2.21	2.30	2.63	2.45	2.90	1.74	1.85	1.97	1.69
	N	33	33	32	33	33	33	31	33	33	32	32	30	32	32	29	29	30	30	29	30	31	33	32	32
	Variance	.841	1.314	1.668	.903	1.405	.985	.959	.437	.585	1.225	1.254	1.472	1.410	1.047	1.042	1.170	1.252	.861	.756	.921	.798	.570	.418	.544
합 계	Mean	1.90	2.16	2.15	2.07	1.98	2.16	2.42	1.96	2.18	2.36	2.18	2.67	2.35	2.34	2.39	2.08	2.18	2.58	2.27	2.47	1.83	1.81	1.99	1.98
	N	129	129	127	128	128	129	127	129	129	127	128	126	128	128	125	125	125	126	125	126	127	129	128	128
	Variance	.810	1.116	1.239	1.042	1.220	1.101	1.102	.631	.976	1.280	1.235	1.664	1.190	1.437	1.305	1.381	1.340	1.526	1.264	1.627	.938	.824	.827	1.078

U1. 도로미늘안갈다주차장 등 U2. 마을설타공원 등 U3. 상하수도 U4. 소화전구거 및 배수시설 U5. 오수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U6. 텔레비전 수신망 및 인터넷망 U7. 마을버스 등 교통사정 U8. 주택사정	U9. 항목 없음 U10. 마을회관경로당어린이놀이터 U11. 병원보건지소 등 의료시설 U12. 문화오락시설 U13. 항목 없음 U14. 교육기자재·학교급식시설 U15. 학교버스 U16. 경지정라수리시설·하천정비	U17. 공동작업장·공동건조장 U18. 농임산물창고, 농기계보관창고 U19. 농로임도시설 U20. 농임산물 가공시설 U21. 항목 없음 U22. 영농정보기술의 제공·교육	U23. 농촌관광사업 지원 U24. 농촌부업 등 농외소득기회 U25. 건강관리시설 확충 U26. 마을지도자 육성 U27. 젊은 농민의 귀농 [이하 동일]
--	--	---	--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송두범 연구위원
공동연구 · 조봉운 책임연구원

총발연 2006-04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글쓴이 · 송두범 · 조봉운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6년 10월 31일 / 발행 · 2006년 10월 31일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12-1 (301-745)
전화 · 042-820-1104(연구실장) / 팩스 · 042-820-1129
ISBN · 978-89-89552-74-1 93030
<http://www.cdi.re.kr>

©2006.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